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0년 11월호 통권 제11호

CONTENTS

경제·산업동향

경제·산업현안 | 최근 국내경제 동향의 특징
국내외 ESG 채권시장 현황과 시사점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규제와 친환경차 지원 동향

경제·산업이슈 | 모성보호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0년 11월호 통권 제11호

Contents

경제·산업동향 3

Ⅰ. 국내경제·산업동향 6

Ⅱ. 해외경제동향 41

경제·산업현안 61

Ⅰ. 최근 국내경제 동향의 특징 62

Ⅱ. 국내외 ESG 채권시장 현황과 시사점 71

Ⅲ.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규제와 친환경차 지원 동향 77

경제·산업이슈 83

Ⅰ. 모성보호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84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ART 1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

Ⅰ. 국내경제·산업동향 ····· 6

1. 생산 ····· 6
2. 소비 ····· 11
3. 투자 ····· 13
4. 대외거래 ····· 18
5. 고용 ····· 22
6. 소비자물가 ····· 26
7. 금융시장 ····· 28
8. 부동산 ····· 33
9. 에너지 및 원자재 ····· 35
10. 인구 ····· 38
11.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 39

Ⅱ. 해외경제 ····· 41

1. 미국 ····· 41
2. 중국 ····· 45
3. 유로지역 ····· 48
4. 일본 ····· 51
5. 브라질 ····· 54

[전세계 코로나19 확산현황] ····· 56

[주요 경제정책] ····· 59

주요 거시·산업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9				2020					
	연간	2Q	3Q	4Q	1Q	2Q	3Q	8월	9월	10월
전산업생산	0.6	0.4 (0.6)	0.7 (0.9)	1.9 (0.9)	1.6 (-1.2)	-3.4 (-3.5)	-0.5 (2.6)	-3.4 (-0.8)	3.4 (2.3)	-
광공업생산	-0.1	-0.3 (1.4)	0.3 (1.9)	2.2 (1.1)	5.1 (0.1)	-5.1 (-7.1)	0.9 (5.7)	-2.6 (-0.3)	8.0 (5.4)	-
서비스업생산	1.4	1.3 (0.3)	1.5 (0.6)	1.9 (0.7)	-1.1 (-3.0)	-3.4 (-1.5)	-1.7 (1.9)	-3.8 (-1.0)	0.0 (0.3)	-
소매판매액	2.4	2.0 (0.5)	2.2 (0.3)	3.4 (1.9)	-2.9 (-6.4)	1.9 (6.5)	1.8 (-0.7)	0.3 (3.0)	4.4 (1.7)	-
설비투자지수	-6.2	-6.7 (3.2)	-1.9 (1.0)	3.7 (4.3)	7.0 (-3.0)	6.3 (5.6)	7.8 (-0.2)	-1.4 (-4.4)	16.8 (7.4)	-
건설기성액	-6.9	-6.8 (-1.8)	-8.2 (-3.5)	-2.9 (1.0)	0.3 (4.1)	-4.1 (-4.6)	-1.6 (-3.6)	-9.6 (-7.3)	6.3 (6.4)	-
수출(통관)	-10.4	-8.7	-12.3	-11.8	-1.8	-20.3	-3.2	-10.1	7.6	-3.6
수입(통관)	-6.0	-3.3	-4.1	-9.7	-1.8	-16.1	-8.9	-15.8	1.6	-5.8
경상수지 (억달러)	600	104	192	181	133	58	242	65.7	102.1	-
실업률	3.8	4.1	3.3	3.1	4.2	4.4	3.6	3.1	3.6	3.7
취업자수 (천명)	301	237	366	422	288	-407	-314	-274	-392	-421
소비자물가	0.4	0.7	0.0	0.3	1.2	-0.1	0.6	0.7	1.0	0.1
원/달러환율	1,166	1,167	1,194	1,176	1,195	1,220	1,188	1,186	1,178	1,142
국고채금리 (3년)	1.53	1.64	1.28	1.41	1.23	0.92	0.85	0.83	0.91	0.91
주택매매가격지수	-0.30	-0.50	-0.13	0.70	1.09	0.88	1.46	0.47	0.42	0.32

주: 1. ( )안과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감정원

경제·산업동향

경제분석국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개선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서비스업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

■ **해외수요 확대로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일평균수출액은 지난 1월 이후 처음 전년동월대비 기준 증가(5.6%) 전환**

■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업 생산 및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소비심리도 큰 폭으로 개선**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0.7월) 2.3→(8월) -0.8→(9월) 5.9
- 설비투자지수(전월대비, %): ('20.7월) -0.8→(8월) -4.1→(9월) 7.4
- 소비자심리지수: ('20.8월) 88.2→(9월) 79.4→(10월) 91.6

■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적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

- 국내 고용시장은 10월 취업자수가 대면 서비스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2.1만 명 감소하여 전월(-39.2만 명)보다 감소폭이 확대
-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개선세를 보이던 대외교역이 다시 위축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우려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 정책지원 영향으로 서비스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전년동월대비 0.1%의 낮은 수준을 기록

■ **농축수산물가격(13.3%)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정부의 통신비 지원에 따른 휴대전화료의 큰 폭 하락(-21.7%)에 기인하여 서비스물가(-0.8%)가 하락 전환**

-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휴대전화료의 기여도는 -0.72%p를 차지

10월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으며,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전월 수준을, 주가는 전월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

■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우세 기대, 위안화 강세 등으로 월초부터 가파르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36원 하락한 1,142원(월평균)을 기록**

■ **국고채금리는 미국 금리 상승과 국내 3분기 GDP성장률이 높게 발표되면서 월 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월 초의 낮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 월평균은 전월과 동일한 0.91%를 나타냄**

■ **주가(KOSPI)는 코로나19 재확산세,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요인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9월 대비 2.6% 하락한 2,267을 기록**

Ⅰ. 국내경제·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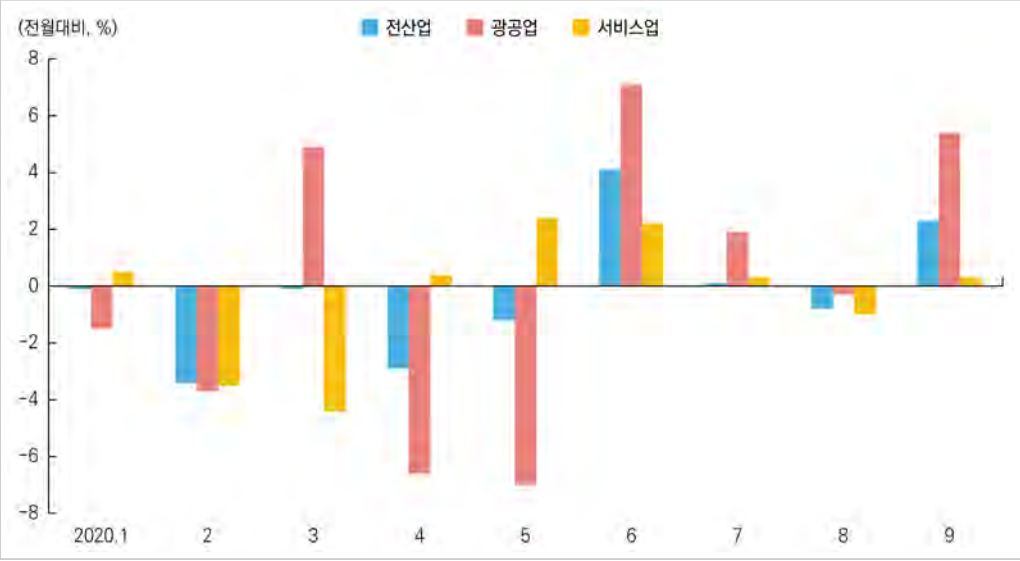
1. 생산

9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증가하며 전월대비 2.3% 증가

- 광공업생산은 9월 수출이 증가 전환하면서 자동차(13.3%), 반도체(4.8%)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5.4%의 큰 폭 증가 (전년동월대비 8.0%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추석 명절효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도소매(4.0%), 운수·창고(2.7%) 등에서 늘어나 전월대비 0.3% 증가 (전년동월대비 0.0%)

[그림 1]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9월 중 석유업(전월대비 -2.7%)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산업에서 생산이 증가

■ **광공업과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5.4%, 5.9% 상승**

■ **재택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전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경제활동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자동차와 섬유, 무선통신기기 소비도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9월 중 반도체와 자동차, 가전 부문에서 큰 폭으로 생산이 늘어나며 8.3% 증가로 전환**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0.7월)-2.2→(8월)-2.7→(9월)8.3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가중치 비중	2019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분기*	8월*	9월*	전월대비
광공업(원지수)	100.0	106.3	100.2	106.9	105.7	112.5	106.7	100.3	112.4	5.4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0.1	-2.4	-0.3	0.3	2.2	0.9	-2.6	8.0	
제조업(원지수)	95.0	106.2	99.1	107.2	105.9	112.6	107.1	100.0	113.3	5.9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0.1	-2.2	-0.6	0.5	2.4	1.1	-2.7	8.3	
반도체	14.9	11.7	3.6	6.9	8.9	25.7	21.5	21.2	26.0	4.8
자동차	9.7	-0.9	2.6	1.9	0.1	-7.4	-1.5	-11.4	15.4	13.3
화학	8.8	-2.5	-2.5	-5.6	-1.9	0.2	-3.9	-4.8	1.1	2.5
일반기계	8.4	-5.9	-13.3	-8.3	-4.2	2.7	7.9	3.5	9.8	2.0
철강	4.6	-2.2	-1.8	-2.2	-1.9	-2.7	-8.4	-8.6	-1.1	6.0
조선	2.0	17.0	8.9	21.7	22.8	15.4	10.6	4.4	16.6	4.9
석유	1.9	-1.8	1.5	-2.8	-0.5	-5.1	-8.5	-8.9	-10.4	-2.7
섬유	1.4	-5.7	-7.5	-7.4	-3.1	-5.1	-9.9	-14.3	-0.8	7.0
무선통신기기	1.3	-3.1	-15.8	-7.7	3.2	6.4	-24.0	-37.3	-16.9	7.3
가전	0.7	-3.2	2.2	-5.1	-4.8	-4.8	19.5	17.0	21.8	7.6
컴퓨터•주변장치	0.3	-8.4	3.8	-10.7	-11.8	-14.8	-5.8	-6.4	1.7	14.5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부문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높은 생산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달 전월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던 자동차와 일반기계 부문도 증가로 전환

■ **반도체 부문의 생산은 전월대비 4%이상의 증가율을 유지**

- 전년동월대비로는 26%의 높은 생산증가율을 보임: ('20.7월)17.0%→(8월)21.2%→(9월)26.0%

■ **자동차 부문은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의 신차출시가 이어지고 있고, 8월 휴가철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데 대한 기저효과가 더해져 전월대비 13.3% 증가**

-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15.4% 증가한 것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조업일수가 증가(2일)하였고, 고부가가치 차종의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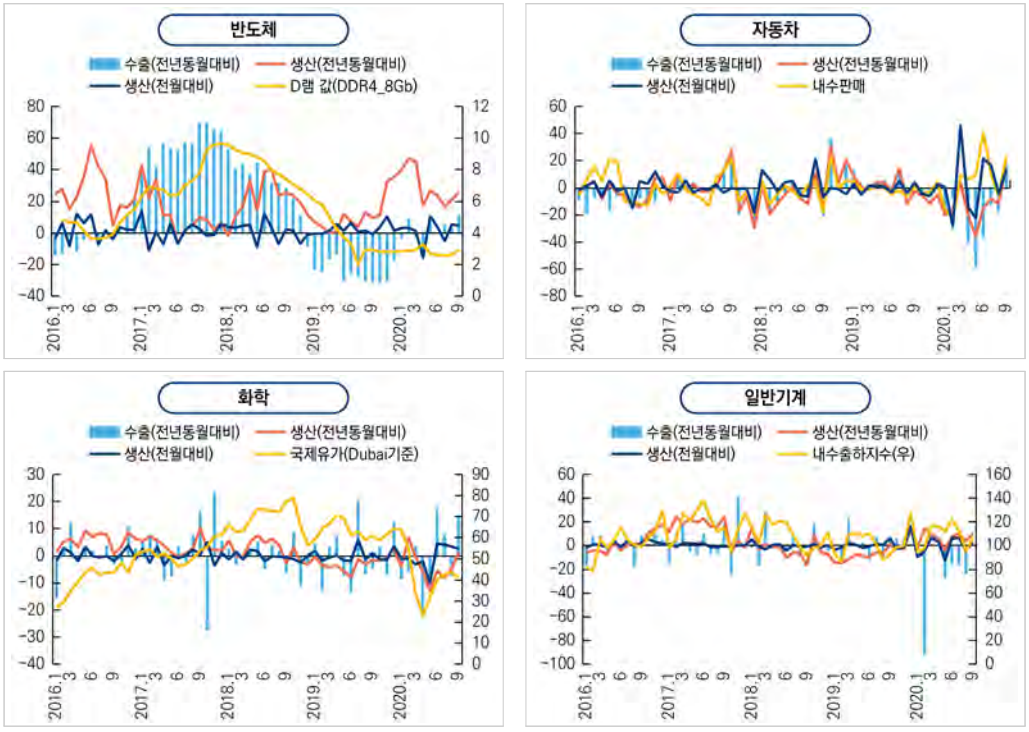
■ **화학 부문은 소비재시장이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플라스틱 및 합성수지, 중간재 생산이 증가하는 데 힘입어 화학산업 전체 생산이 전월대비 2.5% 증가로 전환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일반기계 부문의 생산은 전월대비 2.0%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자동화기기 및 AI관련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 기인**

- 전년동월대비로는 일반 목적용 기계 및 특수 목적용 기계 생산이 각각 4.5%, 13.2% 증가하는 등 9.8% 증가

[그림 2] 제조업 세부산업별 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 달러)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서비스업생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련 소비 등이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 운수 등이 늘면서 전월대비 0.3% 증가 (전년동월대비 0.0%)**

[표 2] 서비스업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가중치 비중	2019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분기*	8월*	9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00.0	108.4	104.6	108.5	107.7	112.7	105.9	104.1	106.8	0.3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4	0.9	1.3	1.5	1.9	-1.7	-3.8	0.0	
도매 및 소매	21.1	-0.4	-0.7	-0.3	0.2	-0.6	-1.7	-5.8	3.0	4.0
금융 및 보험	14.1	1.7	0.6	0.8	3.5	2.1	16.6	15.3	19.9	-2.4
교육	10.6	-0.5	-0.4	-0.7	-0.2	-0.7	-4.2	-3.2	-5.2	-1.8
보건 및 사회복지	9.4	8.1	8.3	9.9	5.8	8.4	0.2	0.2	-0.6	0.7
운수	9.0	0.0	1.5	-1.1	0.4	-0.6	-16.1	-19.6	-12.9	2.7
출판·영상·방송	8.0	3.5	2.5	3.3	2.7	5.1	-0.2	-2.0	0.6	-0.4
전문, 과학 및 기술	7.1	1.4	0.4	1.8	2.3	1.2	-0.7	-5.2	3.0	2.4
숙박 및 음식점	6.2	-1.0	-1.2	-0.8	-2.4	0.4	-15.6	-16.9	-21.2	-7.7
사업시설관리지원	4.8	2.3	-0.9	2.6	2.8	4.4	-9.8	-9.4	-8.9	0.8
협회·수리·기타개인	3.2	-1.5	-2.1	-0.8	-2.6	-0.6	-5.2	-7.9	-3.0	-0.7
부동산 및 임대	3.2	0.4	-2.9	-1.6	0.6	5.4	5.9	2.6	2.2	-1.0
예술·스포츠·여가	2.2	1.2	2.7	0.5	-0.9	2.7	-34.0	-36.8	-35.0	-1.9
하수·폐기물 처리	1.1	-0.4	-1.6	-3.1	0.6	2.5	1.4	-4.5	10.9	6.4

주: *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업종별로는 추석 명절과 관련한 도매 및 소매와 운수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 등은 부진한 모습

■ **도매 및 소매는 전월대비 자동차 판매업이 소폭(-0.8%) 감소하였으나, 도매업과 소매업(자동차 제외)이 각각 5.6%, 2.3%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4.0% 증가**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도 3.0% 증가하였는데, 음·식료품 소매업과 대형마트 소매업 등이 각각 7.1%, 8.0%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판매업은 26.7% 증가
- 자동차 판매업(전년동월대비, %): ('20.7월)18.4→(8월)12.2→(9월)26.7

■ **운수는 전월대비 육상여객 운송업과 철도 운송업에서 각각 9.0%, 12.8% 줄어들었으나, 도로화물 운송업(화물차, 택배, 늘찬배달(퀵서비스))이 11.6%, 항공 화물 운송업이 8.4%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2.7% 증가**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9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도로화물 운송업과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각각 9.4%, 21.8% 증가하였으나, 그 외 모든 부문이 부진하여 12.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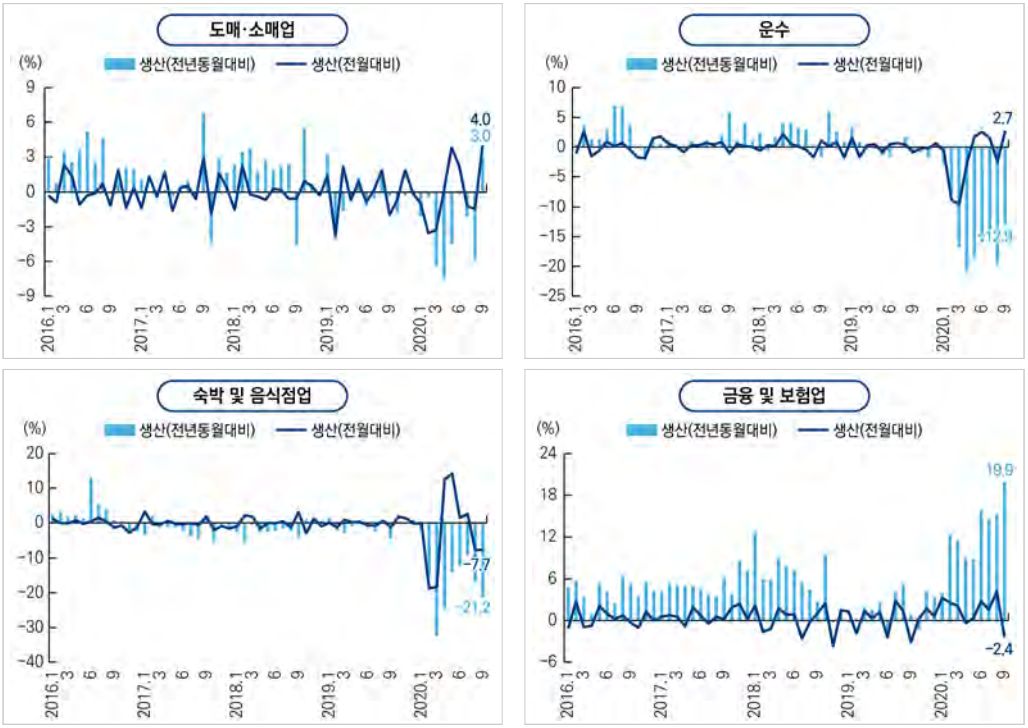
■ **숙박 및 음식점은 전월대비 기준 숙박업이 21.2%, 음식점 및 주점업이 5.9%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7.7%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숙박업이 37.0%, 음식점 및 주점업이 18.8% 줄어들면서 21.2% 감소
- 숙박업(전년동월대비, %): ('20.7월)-19.4→(8월)-25.4→(9월)-37.0

■ **금융 및 보험은 전월대비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9.4%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2.4%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19.9% 증가하였는데, 금융업이 6.5%, 보험업이 7.8% 늘어났으며,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등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96.2% 증가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년동월대비, %): ('20.7월)73.0→(8월)92.8→(9월)96.2

[그림 3] 주요 서비스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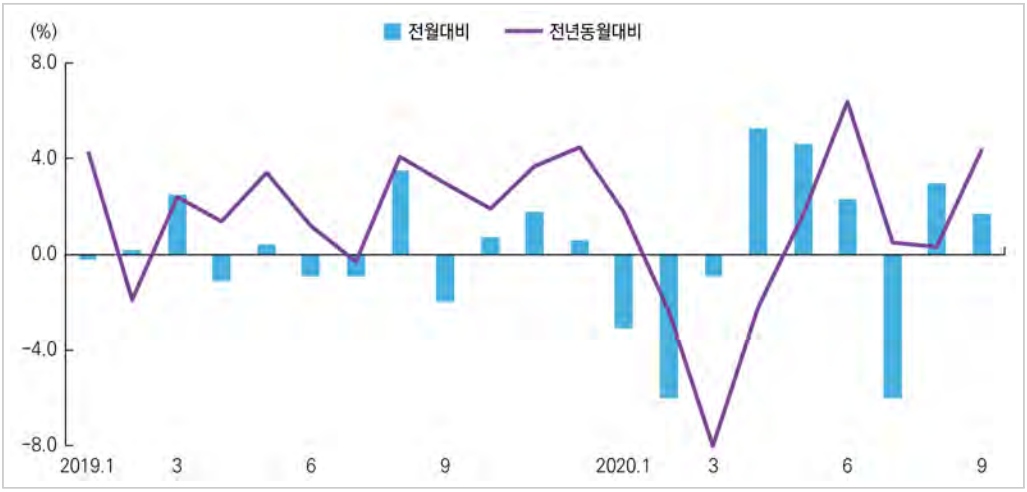
2. 소비

소매판매는 가정식 수요 증가와 명절효과에 따른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

■ **9월 중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7% 증가하여 전월(3.0%)에 이어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도 4.4% 증가하며 5월부터 증가세 지속
-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 ('20.7월)-6.0→(8월)3.0→(9월)1.7
-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20.7월)0.5→(8월)0.3→(9월)4.4

[그림 4]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 **비내구재 판매는 8월 중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가정식 수요가 증가하고 9월 추석을 앞두고 음식료품 수요가 늘면서 전월(0.7%) 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3.0%를 기록**

- 비내구재판매(전월대비, %): ('20.7월)-0.5→(8월)0.7→(9월)3.1
- 음식료품판매(전월대비, %): ('20.7월)-0.3→(8월)2.1→(9월)7.9

■ **내구재판매는 전월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승용차와 통신기기 및 컴퓨터 판매가 감소 전환되면서 전월대비 0.7% 감소**

- 내구재판매(전월대비, %): ('20.7월)-15.4→(8월)12.7→(9월)-0.7
- 승용차판매(전월대비, %): ('20.7월)-19.7→(8월)3.9→(9월)-1.6
- 통신기기 및 컴퓨터판매(전월대비, %): ('20.7월)-1.2→(8월)16.1→(9월)-3.7

[그림 5] 내구재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6] 비내구재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 **준내구재 판매는 기상여건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외부활동이 줄면서 2개월 연속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5% 증가 전환**

- 준내구재판매(전월대비, %): ('20.7월)-5.6→(8월)-4.4→(9월)1.5
- 의복판매(전월대비, %): ('20.7월)-7.9→(8월)-7.7→(9월)1.1
- 신발·가방판매(전월대비, %): ('20.7월)-6.1→(8월)-5.7→(9월)1.3
- 오락·취미·경기용품(전월대비, %): ('20.7월)-1.2→(8월)-0.2→(9월)3.5

■ **소비자심리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으로 소비자들의 경기 및 소비지출 전망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월대비 12.2포인트 상승한 91.6을 기록**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8.8포인트 하락한 79.4를 기록하였으나,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로 낮추면서 큰 폭 상승
- 현재경기판단CSI: ('20.8월)54→(9월)42→(10월)58
- 향후경기전망CSI: ('20.8월)75→(9월)66→(10월)83
- 소비지출전망CSI: ('20.8월)99→(9월)92→(10월)100

[그림 7]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3.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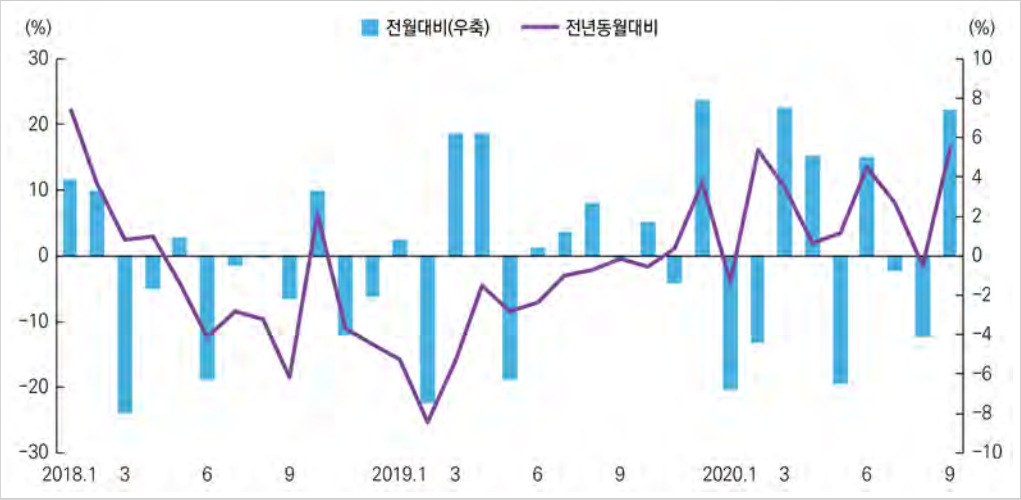
가.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전환

■ **9월 중 설비투자는 기계류(-1.5%)에서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으나 선박 등 운송장비(34.3%)에서 큰 폭으로 늘며 전월(-4.1%)의 부진에서 벗어나 7.4%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류(12.9%)에서 전월(6.4%)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고 자동차 등 운송장비(27.1%)에서 큰 폭으로 증가 전환

[그림 8] 설비투자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 **기계류 투자는 전기및전자기기(5.6%), 기타기기(8.6%)에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4.4%)와 정밀기기(-5.8%)에서 전월의 감소세가 유지되며 전체적으로 1.5% 감소**

■ **운송장비 투자는 자동차(18.6%)와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61.7%)에서 모두 큰 폭으로 늘어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34.3% 증가**

[그림 9] 기계류 및 운송장비 형태별 투자

자료: 통계청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31.4%)와 기계류 내수출하(8.6%) 모두 지난 2개월 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큰 폭으로 증가 전환**

-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제조업 39.8%, 비제조업 13.9%)이 30.1% 증가하고, 공공부문도 61.2% 증가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8.6% 늘어 지난 4월(8.8%)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시현

■ **기계류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등에서 전월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여타 기계류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호조를 보임**

- 9월 중 기계류수입액(33.9%)은 반도체제조용장비(31.2%)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1,731.9%)에서 전월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를 제외한 기계류수입액이 34.4% 늘어 전월(1.4%)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
- 특히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수입액은 지난해 3/4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에서 벗어나 금년 3/4분기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1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늘어난 IT가전 및 관련 전자기기수요 증가에 따른 투자확대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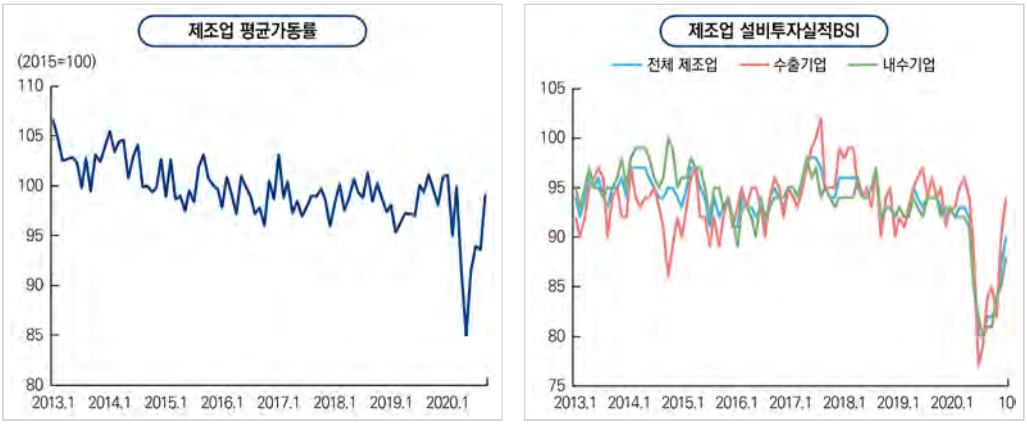
[그림 10] 기계류수입액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반도체협회, 통계청, 무역협회 DB

■ **설비투자실적 관련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0월 중 전월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9월 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

-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BSI: ('20.8월)83→(9월)87→(10월)90 (수출기업 94, 내수기업 88)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기장비제조업(107.5), 기타 운송장비제조업(119.4)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제조업 평균가동률(계절조정,2015=100): ('20.7월)94.0→(8월)93.6→(9월)99.2

[그림 11] 제조업 평균가동률 및 설비투자실적 BSI



자료: 통계청

나.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증가 전환되었으며, 주택부문 선행지표의 개선세도 지속되는 모습

■ **9월 중 건설기성액(불변, 계절조정)은 여름철 계절적 영향이 해소되고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하면서 전월대비 기준 건축(7.0%)과 토목(5.0%)이 모두 늘어나 전체적으로 6.4% 증가(전년동월대비 6.3% 증가)**

- 발주자별(경상, 계절조정)로도 공공부문(9.6%)과 민간부문(7.0%)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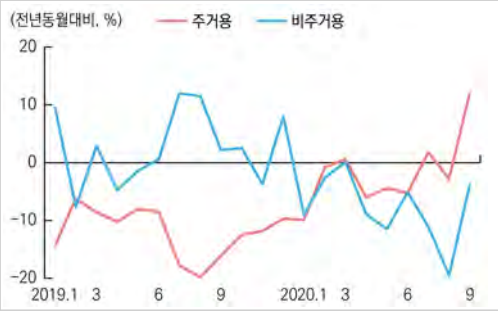
[그림 12] 건설기성액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 **건축부문(경상)은 비주거용(-3.6%)이 감소하였으나 주거용(12.2%)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대비 6.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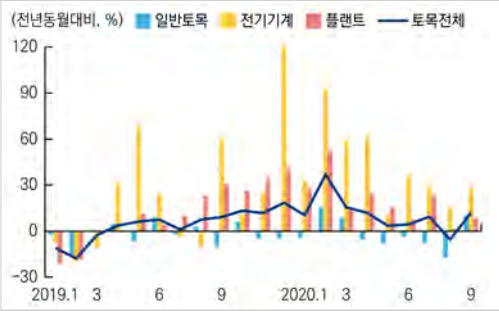
- 토목부문은 12.0% 증가하였는데 부문별로는 일반토목(10.4%), 전기기계(27.6%), 플랜트(8.4%), 조경공사(16.1%) 등에서 크게 증가

[그림 13] 건축부문별 건설기성액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4] 토목부문별 건설기성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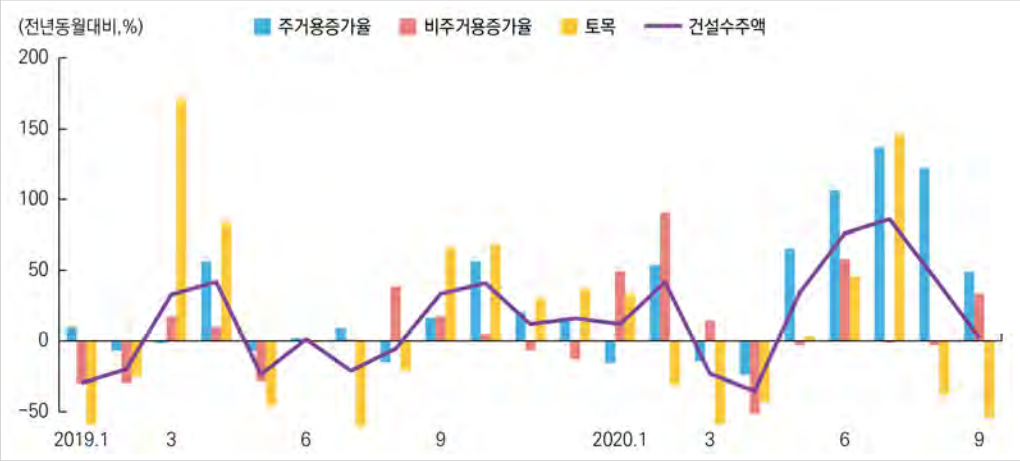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경상)과 건축허가면적(경상)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문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나타냄**

- 9월 건설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건축 42.7%, 토목 -53.8%)
- 세부 공종별로는 주거용 건축(48.7%)과 비주거용 건축(33.4%)이 증가하였으나, 토목(발전및통신 -75.4%, 철도및궤도 -97.5%)은 감소
- 9월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0.0% 증가(주거용과 비주거용은 각각 9.6%, 40.9% 증가)

[그림 15] 공종별 건설수주액 추이



자료: 통계청

■ **10월 중 건설기업실적 경기실사지수(CBSI)는 주거용 부문을 중심으로 신규수주가 증가한 영향으로 소폭 상승**

- 건설업에 대한 건설사업자들의 판단·예측을 나타내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 중 건설기업실적BSI는 전월(75.3)에 비해 4.6p 상승한 79.9를 나타내었으며 신규공사수주BSI는 주택부문 수주가 늘어 89.7을 기록
- 건설기업실적 BSI: ('20.8월)73.5→(9월)75.3→(10월)79.9
- 신규공사수주 BSI: ('20.8월)69.8→(9월)80.4→(10월)89.7

[그림 16]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주: 기준선은 설문 응답자들이 모두 전월에 비해 건설경기가 '보통'이 될 것으로 응답한 경우이며 100보다 작으면 전월에 비해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함; 서울기업과 지방기업은 본사소재지 기준; 장기평균은 80으로 10년 평균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 대외거래

가. 수출

대외거래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일평균수출액이 9개월만에 증가 전환하는 등 부진이 완화된 모습

■ **10월 수출은 명절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2일)으로 전년동월대비 3.6% 감소**

- 다만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수출액(21.4억달러)은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하여 지난 1월(4.2% 증가) 이후 처음 증가로 전환

■ **수입은 자본재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등 에너지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5.8% 감소**

- 가공단계별 주요 품목 수입을 살펴보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34.2% 증가), 원유(-33.0%), 무선통신기기 부품(-19.6%) 등임

■ **10월 무역수지는 59.8억달러 흑자를 시현 (금년 1~10월 중 누계 336억달러 흑자)**

[표 3] 10월 수출입 동향(통관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9년	2020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수출금액 (%)	46,649 (-15.0)	42,793 (-7.1)	39,534 (-10.2)	48,041 (7.6)	44,978 (-3.6)
일평균수출액 (%)	2,028 (-15.0)	1,712 (-7.1)	1,797 (-4.1)	2,089 (-4.1)	2,142 (5.6)
수입금액 (%)	41,397 (-14.6)	38,700 (-11.6)	35,737 (-15.8)	39,345 (1.6)	38,997 (-5.8)
무역수지	5,252	4,092	3,797	8,696	5,98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0년 10월 수출입동향」보도자료

10월 주요 11대 산업[1]의 수출은 조업일수(2일) 부족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주요 4대 시장 중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감소

■ **10월 중 11대 산업의 수출은 325.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0% 감소**

■ **주요 4대 시장 중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중국의 10월 초 8일 간의 연휴로 인해 감소**

1)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산업별로는 반도체·자동차·컴퓨터주변장치·가전 등 4개 산업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화학·석유 산업은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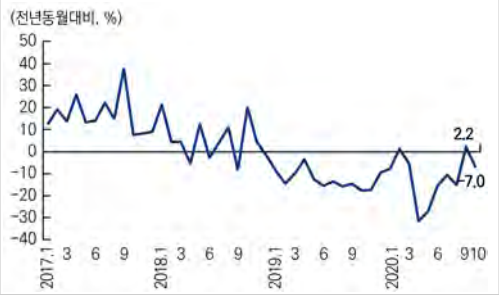
- 자동차 수출은 40.2억 달러로,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유럽에 대한 친환경자동차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SUV와 친환경자동차 단가의 지속 상승, 우리 기업의 소형 SUV 신차의 판매 호조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증가(5.8%)

- 반도체 수출은 86.8억 달러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에도 불구, 대형 데이터센터 기업들의 예상보다 빠른 서버투자 재개,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의 수요 지속,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신규 모델 출시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4개월 연속 증가(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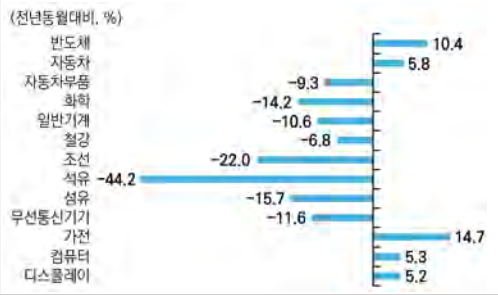
- 가전 수출은 7.1억 달러로, 전세계 TV 출하량이 3분기 중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추세이며, 우리 기업의 미국 및 유럽지역 신제품 출시 및 현지 마케팅 강화에 따른 냉장고·세탁기 등의 수출 호조로 4개월 연속 증가(14.7%)

- 화학 및 석유 산업의 수출은 저유가로 인해 각각 14.2%, 44.2% 감소

[그림 17] 11대 산업 수출증감률 추이



[그림 18] 10월 주요 산업별 수출증감률



주: 산업별 수출은 11대 산업 중 컴퓨터주변장치 산업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을 분리,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을 분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지역별[2]로는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감소

- 대미 수출은 65.7억 달러로, 미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산·소비·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주택 경기가 상승하고 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당겨진 연말 쇼핑 수요로 인해 2개월 연속 증가(3.3%)

2) 각 지역의 전체 수출은 9.1~9.31. 기준이나, 각 지역의 품목별 수출 실적은 9.1.~9.25. 기준

- 반도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변환이 가속화되며 PC·태블릿 등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데이터 센터의 견조한 서버 수요로 15.2% 증가
- 가전은 미국 주택시장이 회복세이고, 소매업체들이 연말쇼핑 세일을 11월 말에서 10월로 앞당김에 따라 27.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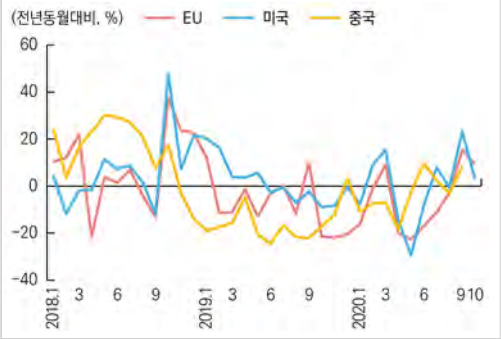
■ **대EU 수출은 47.1억 달러로,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럽 내 경기회복 비관론이 대세이나, 10월 대EU 수출에는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2개월 연속 증가(9.5%)**

- 반도체는 홈오피스·온라인 수업 증가 및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로 13.7% 증가
- 무선통신기기는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프로모션 효과가 지속되어 10.4% 증가
- 가전은 코로나로 인한 자가 체류시간 증가로 TV·청소기·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 수요가 증가하여 4.7% 증가
- 컴퓨터는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 확대로 인한 판매 증가가 지속되어 22.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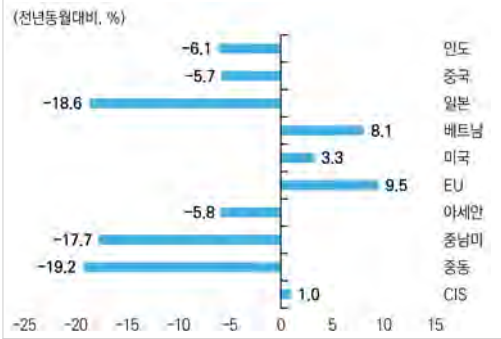
■ **대중 수출은 115.4억 달러로,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10월 중국의 8일 연휴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됨에 따라 감소(-5.7%)**

- 반도체는 지속적 가격 하락에도 경기 안정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3.8% 증가
- 일반기계는 중국내 기계 제조 공장의 지속 성장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여 18.9% 감소
- 석유는 중국발 석유제품 공급과잉과 저유가로 수출 단가가 하락하여 35.6% 감소
- 디스플레이는 국내 기업의 LCD생산라인 감축 영향으로 20.4% 감소

[그림 19]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 추이



[그림 20] 10월 지역별 수출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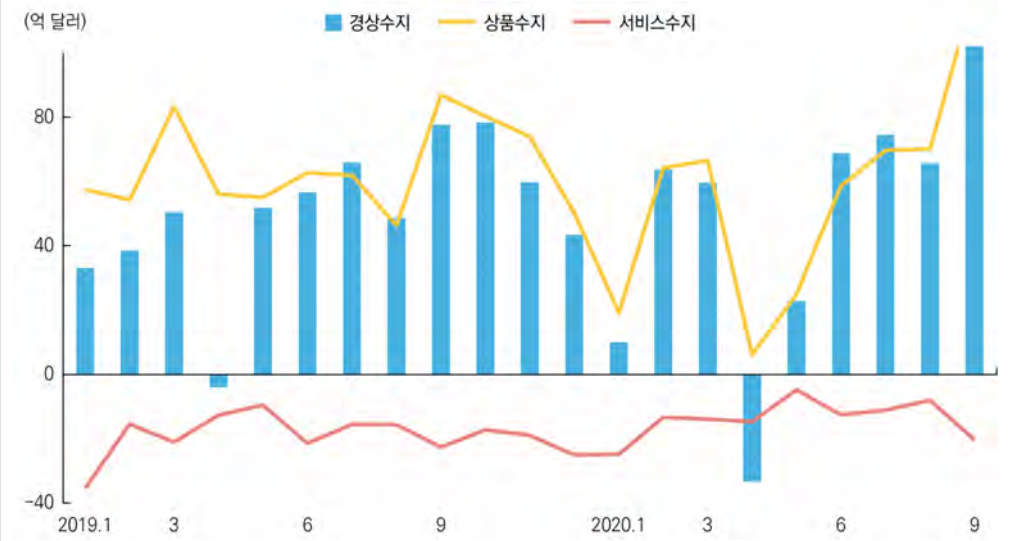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나.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수출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며 큰 폭의 흑자를 기록

- 9월 중 경상수지는 전년동월(77.6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된 102.1억달러를 기록('20년 1~9월 기간 중 누적 434.0억달러 흑자)
- 상품수지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8.0% 증가 전환하면서 전년동월(87.0억달러)에 비해 큰 폭 확대된 120.2억달러 흑자를 기록
- 서비스수지는 여행 및 운송수지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22.6억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축소된 20.4억달러 적자를 시현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수지(7.8억달러→-1.6억달러) 적자 전환 등으로 전년동월(15.4억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축소된 6.1억달러를 나타냄

[그림 21]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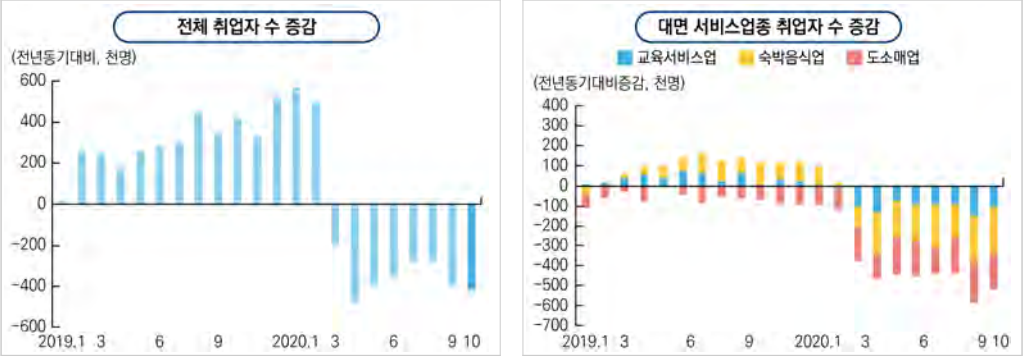
5. 고용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며 고용여건이 악화

■ **10월 중 전체 취업자수(2,708.8만명)는 전년동월대비 42.1만 명(-1.5%) 감소하여 전월(39.2만 명, -1.4%) 보다 감소폭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중 1단계로 완화되었으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주요 대면 서비스업종의 개선세가 미미한 가운데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9월 -6.8만→10월 -9.8만)

[그림 22] 전체 취업자 수 및 대면서비스 업종의 월별 고용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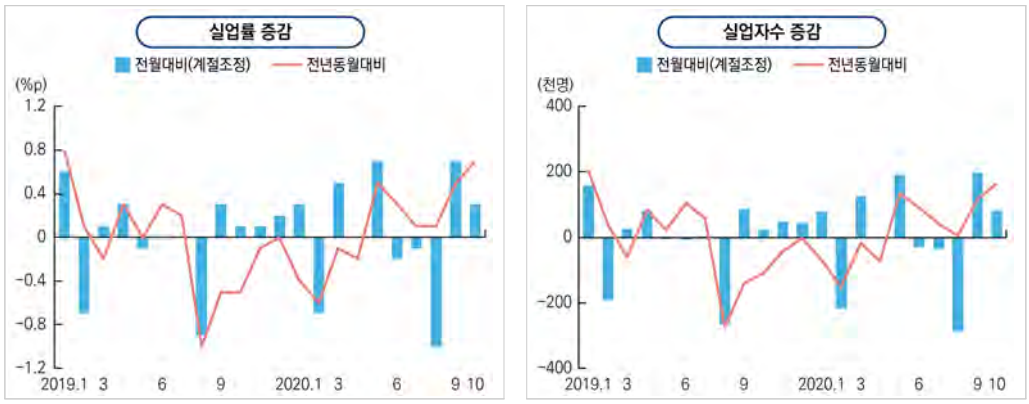
■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하여 전월(60.3%, -1.2%p)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계절조정 고용률은 59.8%로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 성별로는 남성은 70.0%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하였고, 여성은 51.1%로 1.4%p 하락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5.9%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하며 전월(65.4%, -1.4%p)과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전월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실업자 수 증가폭도 전월에 비해 확대**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고, 계절조정 실업률은 4.2%로 전월대비 0.3%p 상승하여 전월의 상승세가 지속
- 실업자 수는 102.8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4만명(19.0%) 증가하여 전월(100.0만명, 전년동월대비 11.6만명 증가)에 이어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계절조정 실업자 수는 117.0만 명으로 전월대비 8.1만명 증가하며 전월(108.8만명, 전월대비 19.7만명 증가)에 비해 증가폭은 둔화

[그림 23] 실업률 및 실업자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피해누적 및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은 확대되었고, 건설업의 증가폭은 소폭 축소

■ **건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20.9월에 증가로 전환되며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10월 들어 증가폭이 소폭 축소**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5월)-6.1→(6월)-6.2→(7월) -2.3→(8월)-0.6→(9월)5.6→(10월)3.6

■ **10월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피해누적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2개월 연속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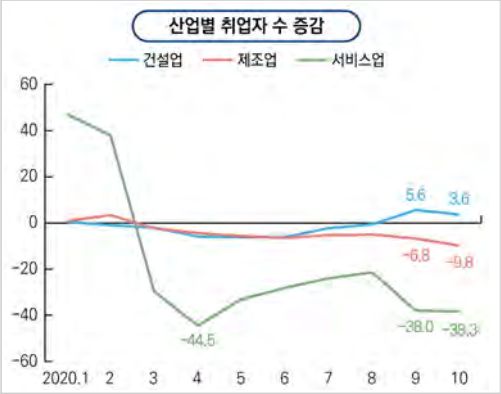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5월)-5.7→(6월)-6.5→(7월)-5.3→(8월)-5.0→(9월)-6.8→(10월)-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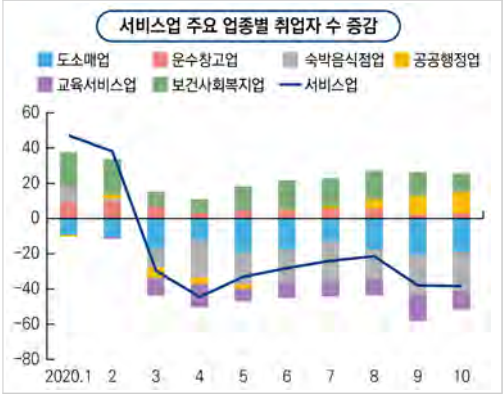
■ **서비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38.3만 명을 기록하며 감소폭이 소폭 확대되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이 지속되는 양상**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5월)-33.3→(6월)-28.1→(7월)-24.0→(8월)-21.4→(9월)-38.0→(10월)-38.3
-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
- '운수 및 창고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9월 이후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공공행정업' 등은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

[그림 24]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만명)





자료: 통계청

연령별로는 60대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세가 위축되었으며, 청년층(15-29세)과 40대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청년층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대면서비스업 및 제조업 등 청년 고용비율이 높은 업종의 고용악화로 2개월 연속 감소폭 확대**

- '20.10월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25.0만 명으로 코로나19의 고용영향이 강했던 '20.4월의 -24.5만 명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 15-29세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5월)-18.3→(6월)-17.0→(7월)-19.5→(8월)-17.2→(9월)-21.8→(10월)-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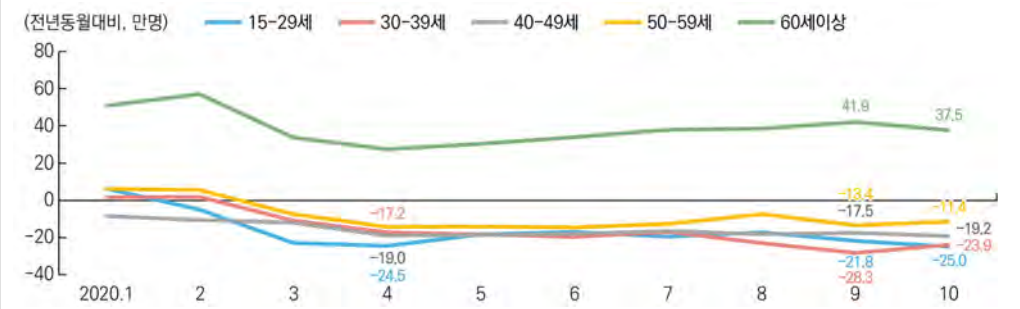
■ **30대와 50대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은 축소된 반면, 40대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소폭 확대**

- 30대의 '20.10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23.9만 명으로 9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지만, 코로나19의 고용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던 지난 4월 대비 악화된 상황이 지속
- 40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19.2만 명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어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50대의 10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11.4만 명을 기록하며 감소폭이 소폭 축소

■ **60세 이상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20.4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10월 들어 증가폭이 소폭 축소**

-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5월)30.2→(6월)33.8→(7월)37.8→(8월)38.4→(9월)41.9→(10월)37.5

[그림 25]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상용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2개월 연속 크게 축소된 반면, 임시일용직은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완화

■ **상용직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증가폭은 9월 이후 2개월 연속 크게 축소**

-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5월)39.3→(6월)34.9→(7월) 34.7→(8월)28.2→(9월)9.6→(10월)1.4

■ **임시일용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4월에 저점을 기록한 후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축소**

-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4월)-78.3→(5월)-65.3→(6월)-49.3→(7월)-43.9→(8월)-39.6→(9월)-34.5→(10월)-32.0

■ **자영업자 수는 '20.6월 전년동월대비 -15.5만 명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완화되었으나, 10월은 9월과 동일한 감소폭을 기록**

- 자영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4월)-7.3→(5월)-8.2→(6월)-15.5→(7월)-12.8→(8월)-10.7→(9월)-7.8→(10월)-7.8

[그림 26]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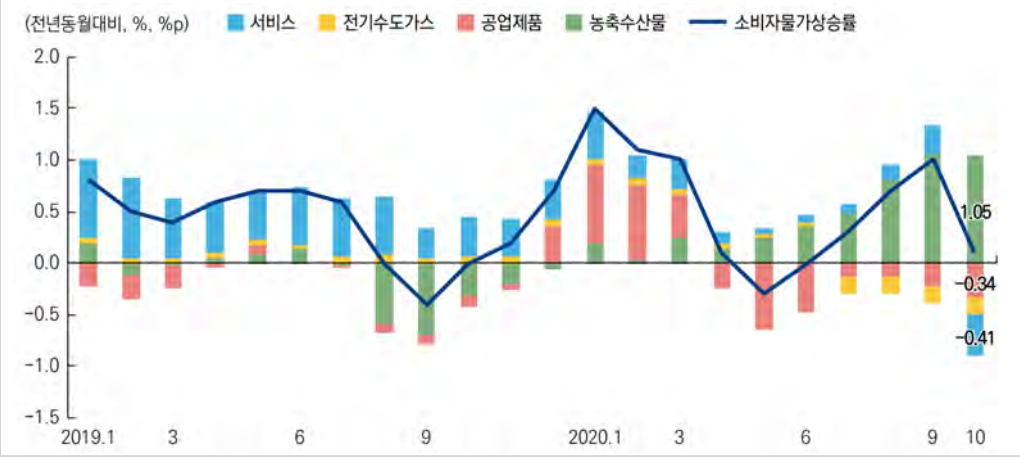
6.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신비 지원에 따른 휴대전화료의 큰 폭 하락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

■ **10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1%를 기록하여 전월(1.0%) 보다 둔화**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는 서비스물가 하락 등에 기인하여 전년동월대비 -0.3%를 기록하여 전월(0.6%) 상승에서 하락 전환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0.8월)0.7→(9월)1.0→(10월)0.1
-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0.8월)0.4→(9월)0.6→(10월)-0.3

[그림 27]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추이



자료: 통계청

■ **서비스물가는 전월세 등 집세(0.5%)와 외식 등 개인서비스(1.4%) 물가 오름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통신비 지원[3] 효과로 휴대전화료(-21.7%)가 급락하면서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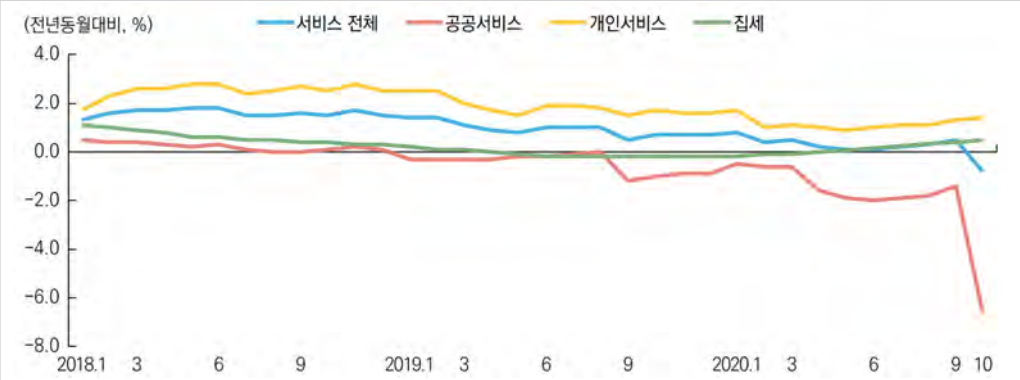
- 서비스(전년동월대비, %): ('20.8월)0.3→(9월)0.5→(10월)-0.8
- 집세(전년동월대비, %): ('20.8월)0.3→(9월)0.4→(10월)0.5
- 개인서비스(전년동월대비, %): ('20.8월)0.5→(9월)1.0→(10월)13.3
- 공공서비스(전년동월대비, %): ('20.8월)-1.8→(9월)-1.4→(10월)-6.6
- 휴대전화료(전년동월대비, %): ('20.8월)-1.2→(9월)-1.2→(10월)-21.7

3) 정부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

■ **통신비가 하락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중 휴대전화료의 기여도는 -0.72%p, 공공서비스요금의 기여도는 -0.91%p를 기록**

- 휴대전화료 물가상승 기여도: 9월 -0.04%p, 10월 -0.72%p

[그림 28] 부문별 서비스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 **공업제품 물가는 수요둔화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제품 내림세가 확대되면서 전월(-0.7%)보다 하락폭이 확대된 -1.0%를 기록**

- 국제유가는 8월 중 OPEC+ 감산, 미국 재고감소, 허리케인 발생 등으로 8월 중 배럴당 43.4달러(3개 유종 평균)을 기록하였으나, 미국 및 유럽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와 리비아 생산재개에 따른 공급 부담 등 하방요인으로 10월 배럴당 39.9달러를 기록
- 공업제품(전년동월대비, %): ('20.8월)-0.4→(9월)-0.7→(10월)-1.0
- 석유류제품(전년동월대비, %): ('20.8월)-10.0→(9월)-12.0→(10월)-14.0

[그림 29]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주: 국제유가는 두바이, 브렌트, WTI 3개 유종 평균
자료: 통계청, Bloomberg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10월부터 가을 배추와 무 출하가 시작되면서 채소류 가격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사과와 배 등 과실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월(13.5%)과 비슷한 13.3%를 기록**

- 농축수산물(전년동월대비, %): ('20.8월)10.6→(9월)13.5→(10월)13.3
- 채소류(전년동월대비, %): ('20.8월)28.5→(9월)34.7→(10월)20.2
- 과실류(전년동월대비, %): ('20.8월)7.1→(9월)15.8→(10월)28.5

7. 금융시장

가. 금리

국고채금리는 미국 여야 간 경기부양안 타결과 대통령·의회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가 미국 채권시장 수급악화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으로 월 중에는 상승했으나 월평균으로는 전월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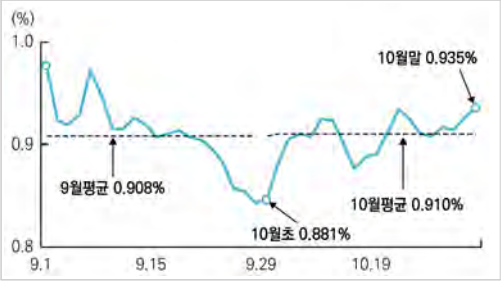
■ **10월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전월과 같은 월평균 0.91%를 기록**

- 상순에는 국고채금리가 낮게 시작하였으나 11월 미국 선거 후에 경기부양책이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미국 금리 상승과 우리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방침 등으로 인해 월 중 상승세
- 또한 하순 국내경제가 전분기대비 1.9% 성장한 것으로 발표된 점도 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 시현
- 국고채금리(%,3년 만기, 월평균): ('20.8월)0.83→(9월)0.91→(10월)0.91

■ **2020년 하반기 들어 미국금리와 국내금리의 연동성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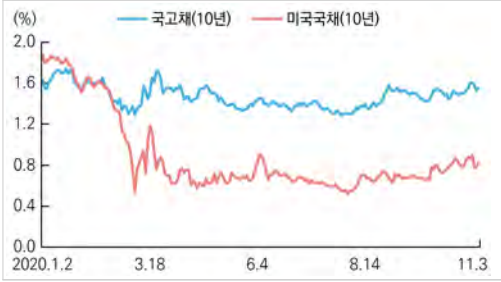
- 미국 정치적 상황이 미국 금리를 거쳐 국내금리에 상승압력으로 작용

[그림 30] 국고채금리(3년 만기) 추이(일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1] 한국 국고채와 미국 국채금리 추이



주: 10년 만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Fed

■ **3/4분기 실질GDP가 비교적 높은 전기대비 1.9% 성장하여 채권금리에는 상승압력으로 작용**

- 수출이 전분기대비 15.6%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미국등 선진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4/4분기에도 높은 경제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며, 이에 따라 금리도 추가 상승할지도 불투명

■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 회복에 힘입어 3/4분기 중 단기채의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하락**

- 기업CP와 은행CD(91일) 간 스프레드가 5월부터 축소되다 10월에는 0.48%p를 기록
- 수출경기 개선에 따라 기업의 단기자금사정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기 때문

[그림 32] 경제성장률과 국고채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33] 신용 스프레드 추이(월별)

주: 단기=CP금리(91일)-CD금리(91일)
3년물=국고채(3년만기)-회사채(AA-,3년만기)

자료: 한국은행

나.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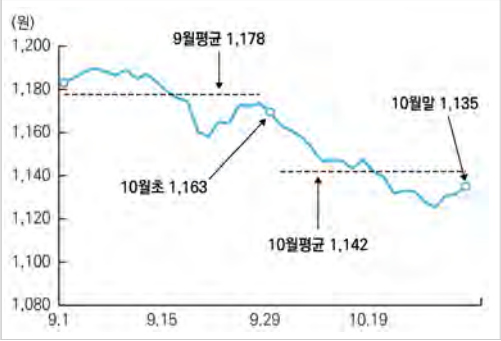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우세 기대, 위안화 강세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월초부터 가파르게 하락

■ **10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36원(3.0%) 하락한 1,142원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하락**

- 외환시장이 미국의 대통령·의회 선거전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민주당의 승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
- 또한 달러화 약세기조 하에서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위안화에 연동되며 강세
- 국내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9%를 나타내며 국내경제의 안정성이 확인된 점도 원/달러 하락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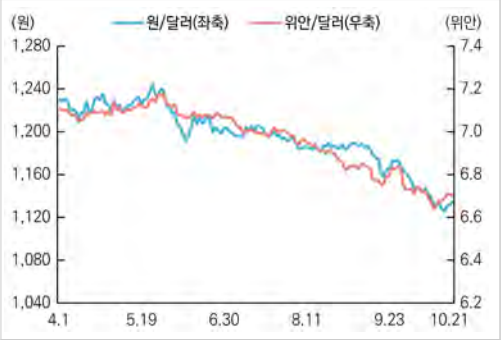
- 다만 미국 여야가 경기부양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미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10월 하순에는 소폭 상승
- 월평균 원/달러 환율(원): ('20.8월)1,186→(9월)1,178→(10월)1,142
- 월평균 위안/달러 환율(위안): ('20.8월)6.93→(9월)6.81→(10월)6.70

[그림 34] 원/달러 환율 추이(일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5] 원/달러 및 위안/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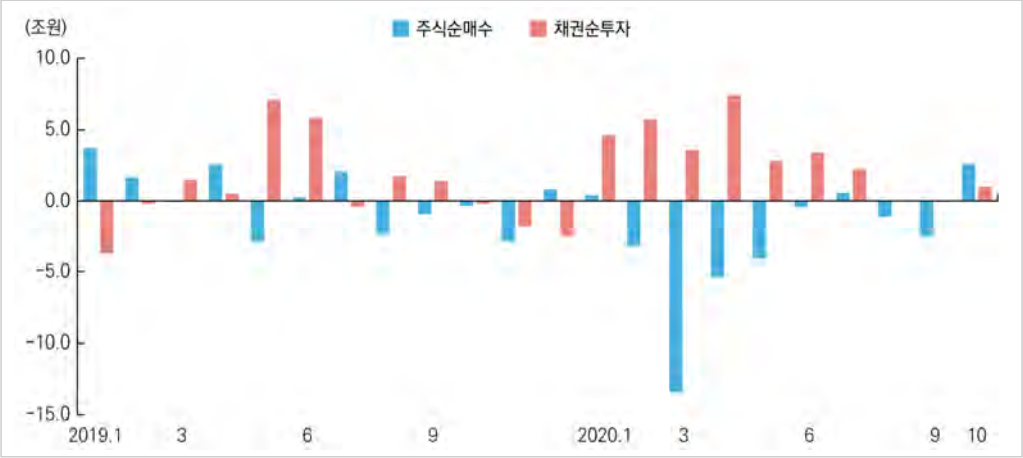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증권투자는 전월 2.6조원을 순매도한 데 반해 10월에는 3.6조원의 순매수로 전환**

- 9월중 코로나19와 미국정치 상황에 기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증권매매에 소극적이었으나 중국 등 아시아의 최근 경제지표가 양호하자 10월 들어 위험자산기피현상이 완화
- 외국인 국내증권순매입(조원): ('20.8월)-0.1→(9월)-2.6→(10월)3.6

[그림 36]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다. 주가

2020년 10월 국내 주가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 글로벌 주가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 확대 등의 영향이 상충되며 혼조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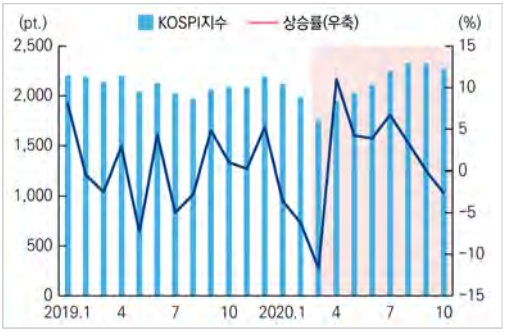
■ **10월말 주가(KOSPI)는 9월대비 2.6%(61pt) 하락한 2,267을 기록**

- 한편 10월말 KOSPI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말 2,198 대비로는 3.2% (69pt) 상회하는 수준

■ **한편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이나 유가증권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잔고를 의미하는 신용잔고는 2020년 3월 이후 큰 폭의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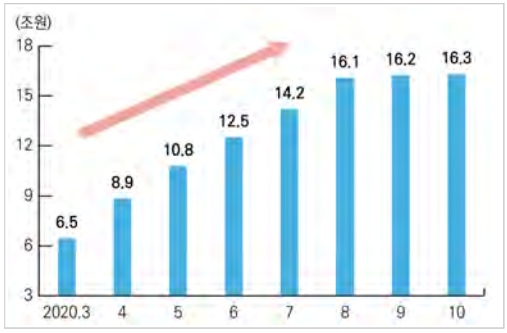
- 2020년 3월말 6.5조원 수준에서 10월말 16.3조원으로 2.5배 증가
- 신용잔고의 증가는 주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아질 경우 개인 투자자금과 관련된 신용리스크 및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

[그림 37] KOSPI 주가 추이



주: 월말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38] 주식 신용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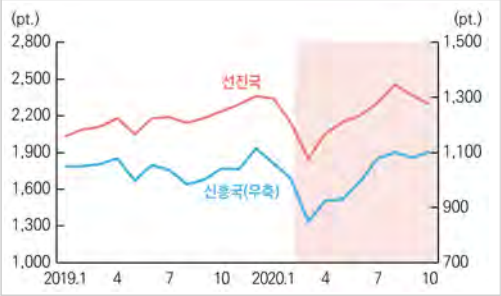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 **10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통제조치 강화,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선진국 주가가 하락한 반면 신흥국 주가는 상승**

- 10월말 선진국 주가는 전월대비 3.1% 하락하였으나 신흥국 주가는 전월대비 2.0% 상승
- 10월말 미국 주가는 전월대비 4.6%, 독일과 일본은 각각 9.4%, 0.9% 하락

[그림 39]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40]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라. 신용위험

2020년 10월 신용위험지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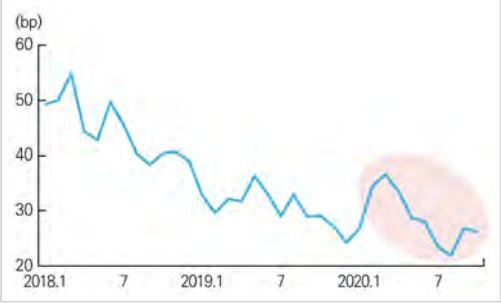
■ **한국 CDS프리미엄[4]은 10월말 기준 26.1bp로 전월대비 0.6bp 하락**

- 한편 한국 CDS프리미엄은 전년말 대비로는 2.0bp 높은 수준

■ **신흥국 채권가산금리[5]와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도 양적완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

- 10월말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전월대비 8.0bp 하락한 404.4bp,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대비 12.5bp 하락한 258.6bp를 기록

[그림 41] 한국 CDS프리미엄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42] 글로벌 신용위험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

4)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
5)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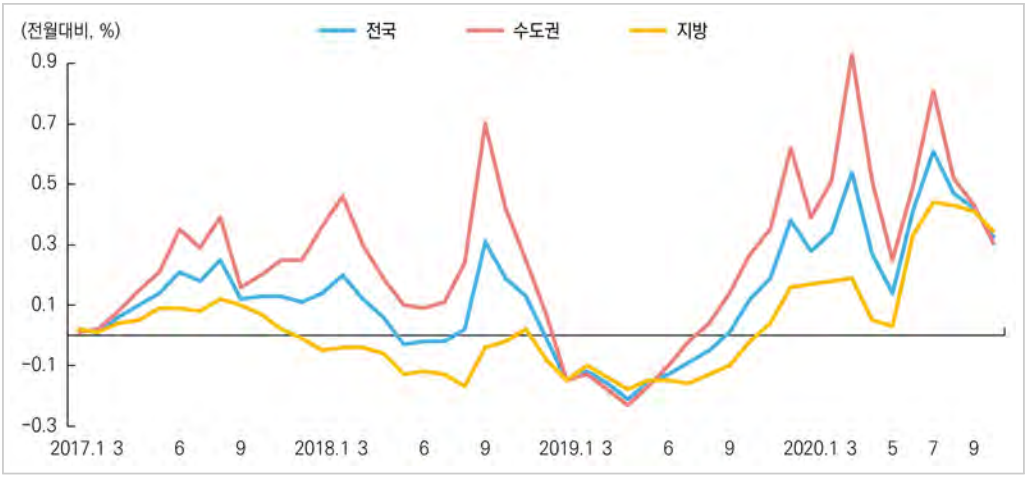
8. 부동산

2020년 10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 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32%, 수도권 0.30%, 지방은 0.34%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

-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인천지역이 교통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 상승폭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의 관망세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
- 지방은 세종(3.83%→1.43%), 대전(1.19%→0.81%), 충남(0.47%→0.33%)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

[그림 43]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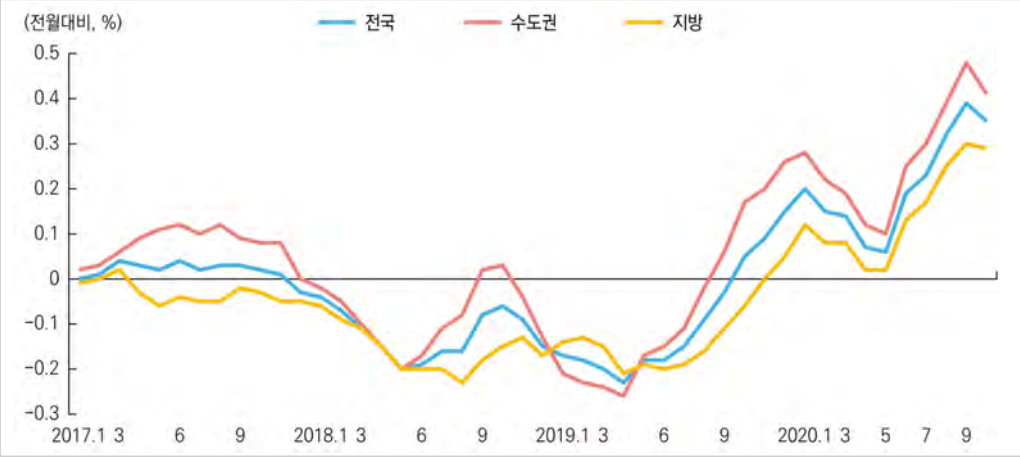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감정원

■ **전국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은 0.35%로 전월(0.39%)에 비해 상승폭 축소**

- 수도권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청구권 시행(7.31), 거주요건 강화 등에 따른 영향이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강화 등에 따른 활동위축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축소
- 지방은 울산(1.08%→0.96%), 세종(4.37%→4.28%), 경남(0.19%→0.13%)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

[그림 44]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추이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감정원

2020년 9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

■ **주택 매매 거래량은 주택 거래세(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상승과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등으로 전월대비 3.9% 감소한 8만 1,928건**

- 수도권(3.8만건)은 전월대비 11.6% 감소,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
- 지방(4.2만건)은 전월대비 4.0% 증가, 전년동월대비 42.6% 증가

[그림 45]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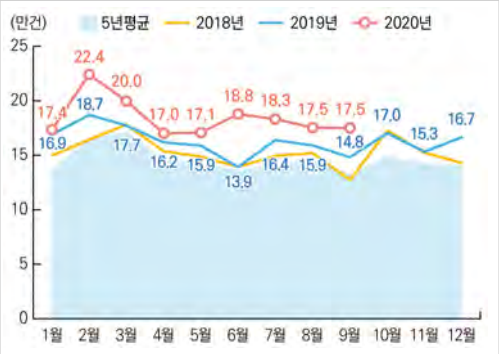
[그림 46] 연도별 8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 **전월세 거래량은 17만 5,126건으로 전월대비 0.1% 소폭 감소, 전년동월대비 18.1% 증가**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1.0%로 전월대비 0.6%p 증가, 전년동월대비 0.5%p 감소

[그림 47]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그림 48]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9. 에너지 및 원자재

10월 수입에너지가격지수는 석탄 가격 상승에 따라 소폭 상승하였으나,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수요 감소로 인해 하락세가 유지되는 상황

■ **10월 원유가격은 배럴당 39.9달러로 전월대비 1.7%, 전년동월대비 30.3% 하락**

- OPEC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석유수요가 2022년경에야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만 2040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OPEC, World Oil Outlook, 2020.10), 2019년이 석유정점이었다는 최근 연구(BP, 2020.9)를 반박
- 저유가 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일부 셰일업체의 파산 및 신규 유전탐사의 지연과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원유 생산능력도 줄어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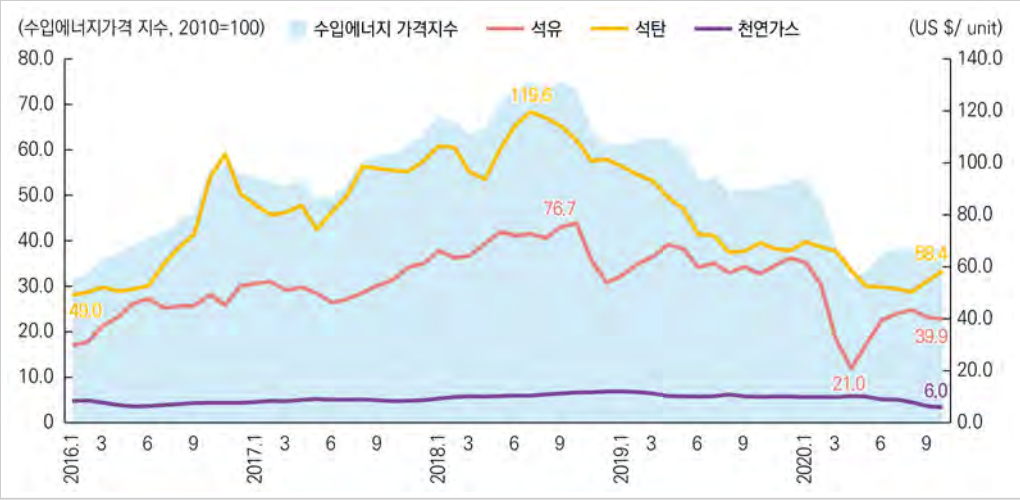
■ **10월 석탄가격은 톤당 58.4달러로 전월대비 7.0% 상승하여 두달 연속 상승함에 따라 금년 4월과 유사한 수준**

- 석탄은 OECD국가를 중심으로 발전용 석탄소비와 석탄화력에 대한 신규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산업생산에 대한 탄소배출량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석탄가격의 반등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

■ **10월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6.0달러로 전월대비 5.8%, 전년동월대비 40.1% 하락하여 최근 5년 내 최저가 기록을 갱신**

※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질량1파운드의 물의 온도를 1°F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그림 49] 국제 에너지 가격과 수입에너지가격지수 추이



주: 1. 수입에너지가격지수는 음영으로 표시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고려하여 석유가격 45.5%, 석탄 33.3%, 천연가스 21.2%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2.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의 단위를 사용하며,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우축을 사용

자료: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10월 원자재 가격지수는 농산물과 식품, 금속광물 지수는 소폭 상승한 반면, 귀금속 지수는 하락하였으나, 전월 대비 변동폭은 감소

■ **10월 농산물지수와 식품가격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2.2%, 3.6%, 전년동월대비 10.8%, 12.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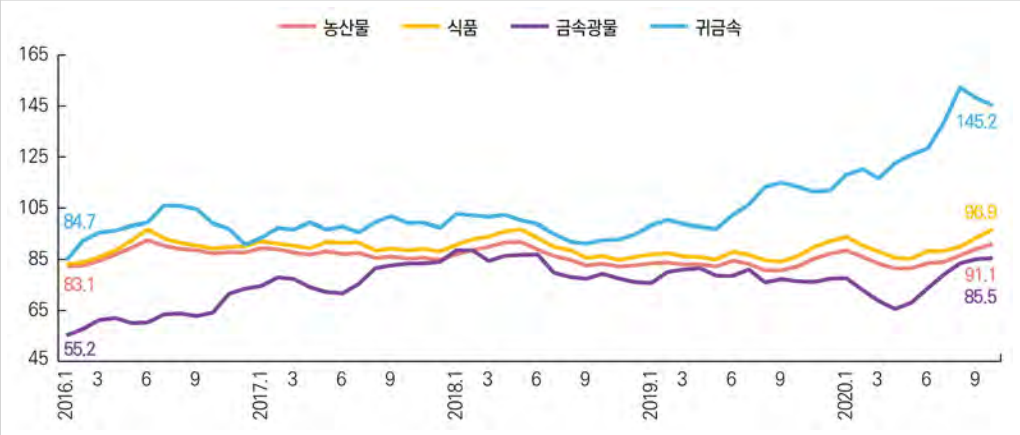
- 식품가격지수는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농산물 지수도 최고치인 92.6(2016년 6월)에 근접

■ **10월 금속광물지수는 85.5로 6개월 연속 상승세에 있으며 최근 5년 최대치인 88.6 (2018년 2월)에 근접**

■ **10월 귀금속지수는 145.2로 전월대비 1.9% 하락하여 두달 연속 하락세이나, 하락폭은 크지 않으며 전년동월대비는 28.1% 상승**

- 10월 귀금속지수는 최근 5년 최저치인 55.2(2016년 1월) 대비 71% 상승

[그림 50]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주: 가격지수는 각 품목의 2010년 평균가격을 100으로 하여 환산
자료: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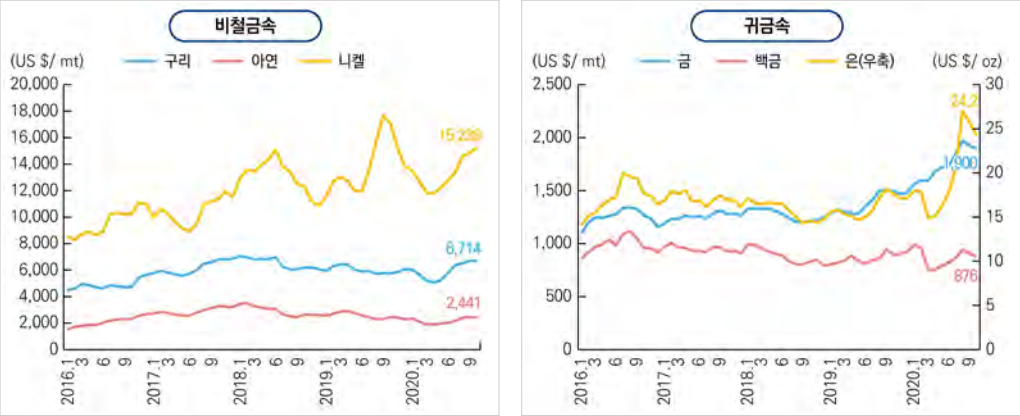
■ **산업생산의 핵심소재인 구리, 니켈 가격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상승폭은 제한적이며, 아연 가격은 8월 이후 등락이 크지 않음**

- 최근 5년 최고가 대비 구리는 95.0%, 니켈은 86.3%, 아연은 69.1% 수준

■ **10월에는 금, 백금, 은 가격이 모두 두달 연속 하락세로 전월대비 각각 1.1%, 3.5%, 5.9% 하락**

- 귀금속 가격은 지난 8월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였으나,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대선 이후 추가 부양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가 있어서 귀금속 가격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

[그림 51] 비철금속 및 귀금속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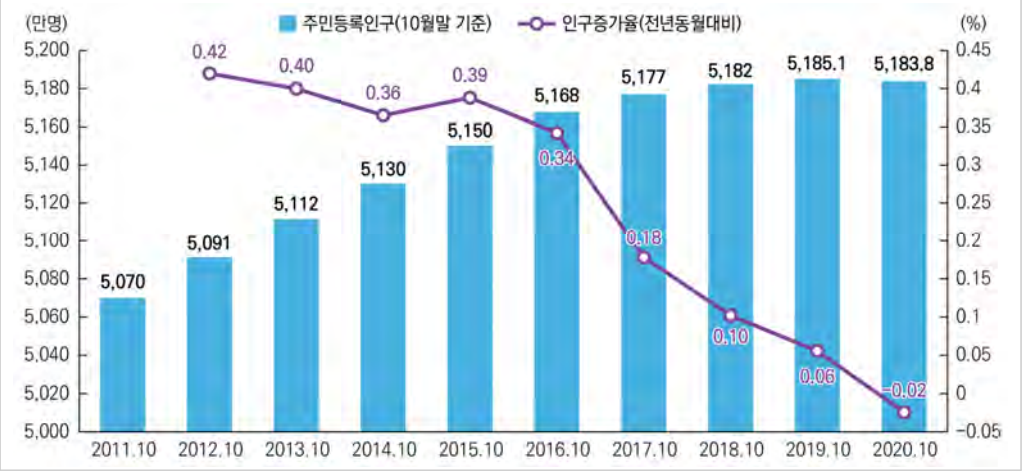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10. 인구

2020년 10월 주민등록인구는 5,183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천 명(-0.02%) 감소

■ 각 연도 10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12년 0.42%, 2015년 0.39%, 2018년 0.10%로 둔화되고 2020년 -0.02%로 감소

[그림 52]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1.10~2020.10)



주: 각 연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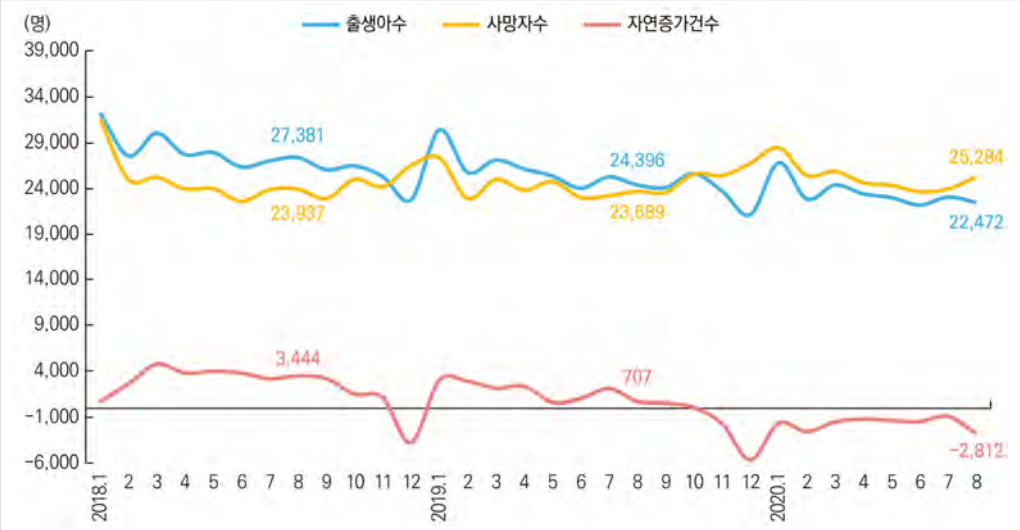
■ 8월 출생아 수는 22,47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24명(-7.8%) 감소

■ 8월 사망자 수는 25,28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95명(6.7%) 증가

■ 8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2,812명 상회하며 인구가 자연감소하였으며, 이로써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0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 발생

- 통상 연도 6~8월 중에 인구 자연증가 빈도가 높지만, 금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출생아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

[그림 53]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



자료: 통계청(2020),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1.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중앙정부 총수입은 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임

■ **2020년 9월 총수입은 36.6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6조원 증가**

■ **국세수입은 22.2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6조원 증가**

- 소득세는 6.7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2조원 증가[6)]
- 반면, 법인세는 8.3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조원 감소
- 부가가치세는 1.9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3조원 감소[7)]

■ **세외수입은 1.9조원으로, 경상이전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1조원 증가**

■ **기금수입은 12.5조원으로,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사회보장기여금은 8.4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8조원 증가

6)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9월→8월) 완료에 따른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증가에 기인
7) 8월 수입액이 424.7조원에서 355.4조원으로 69.3조원(16.3%) 감소한데 기인

[표 4] 중앙정부 총수입 현황

(단위: 조원)

	2019년				2020년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9월	1~9월 누계	4차 추경	9월	1~9월 누계	9월	1~9월 누계
총수입	476.4	473.1	32.9	359.5	470.7	36.6	354.4	3.6	-5.1
국세수입	294.8	293.5	18.6	228.1	279.7	22.2	214.7	3.6	-13.4
- 소득세	80.4	83.6	2.5	60.7	88.5	6.7	65.1	4.2	4.4
- 법인세	79.3	72.2	9.4	65.8	58.5	8.3	50.0	-1.2	-15.8
- 부가가치세	68.8	70.8	2.2	52.0	64.6	1.9	47.7	-0.3	-4.3
기타	66.3	66.9	4.5	49.6	68.1	5.3	51.9	0.9	2.3
세외수입	26.9	25.3	1.9	18.7	29.1	1.9	19.6	0.1	0.9
기금수입	154.7	154.0	12.5	112.7	161.9	12.5	120.1	-0.0	7.4
- 사회보장기여금[1]	90.9	91.1	7.6	67.5	95.8	8.4	72.9	0.8	5.4
세입세출외	-	0.4	0.0	0.0	-	0.0	0.0	0.0	0.0

주: 1)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의 기여금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중앙정부 총지출은 코로나19에 대응한 4차 추경사업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임

■ 2020년 9월 총지출은 46.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0조원 증가

- 예산은 27.3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조원 증가
- 일반회계는 23.9조원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7조원 증가
- 기금은 18.9조원으로, 실업급여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5조원 증가

※ 2020년 9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70.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4만명(56.4%) 증가

[표 5] 중앙정부 총지출 현황

(단위: 조원)

	2019년				2020년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9월	1~9월 누계	4차 추경	9월	1~9월 누계	9월	1~9월 누계
총지출	475.4	485.1	37.1	386	554.7	46.1	434.8	9.0	48.8
예산	332.6	329.0	23.8	268.9	377.5	27.3	304.5	3.5	35.6
일반회계	280.9	277.7	20.1	228.1	323.5	23.9	261.7	3.7	33.7
특별회계	51.7	51.3	3.6	40.8	54.0	3.4	42.7	-0.2	1.9
기금	142.8	144.9	13.4	106.6	177.3	18.9	130.2	5.5	23.7
사회보장성기금[1]	47.6	48.7	4.2	37.0	61.2	5.5	44.9	1.2	7.9
세입세출외	-	11.2	0.0	10.6	-	0.0	0.1	0.0	-10.5

주: 1)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Ⅱ. 해외경제동향

1. 미국

미국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과 대선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지연 등으로 성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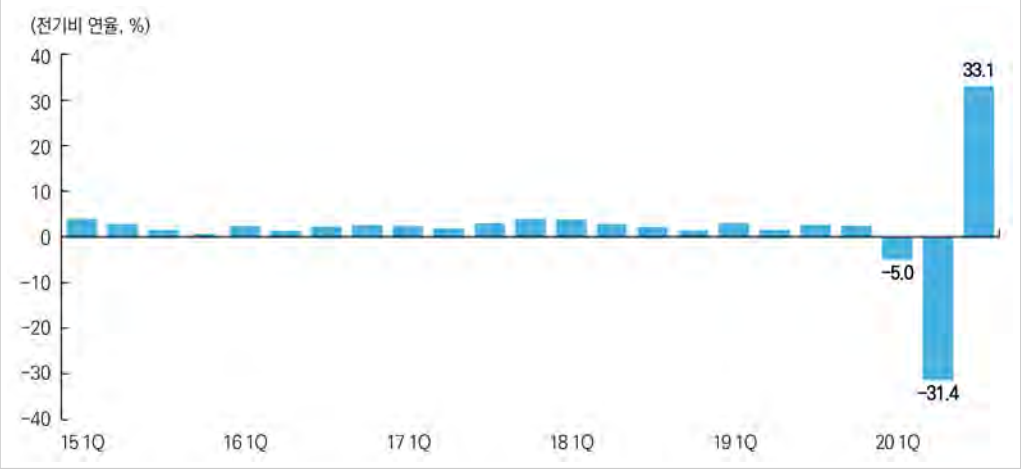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실질GDP성장률(속보치, 전기비 연율)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재개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며 33.1% 기록**

- 개인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으로 일부 서비스 업종의 영업이 재개되며 상품(45.4%)과 서비스(38.4%) 모두 큰 폭으로 늘며 전분기 -33.2%에서 40.7%로 증가 전환
- 민간투자는 비주택투자(20.3%)의 설비(70.1%)*와 주택투자(59.3%)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46.6%에서 83.0%로 증가 전환

  * 비주택투자는 구조물(-14.6%), 설비(70.1%), 지식재산생산물(-1.0%) 등으로 구분됨

- 순수출은 수출(2/4분기 -64.4%→3/4분기 59.7%)에 비해 수입(2/4분기 -54.1%→3/4분기 91.1%)이 빠르게 늘며 마이너스(-)의 성장기여도(2/4분기 0.6%p→3/4분기 -3.1%p)를 나타냄
- 정부지출은 전분기의 대규모 재정지원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분기 2.5%에서 -4.5%로 감소 전환(연방정부지출 16.5%→-6.2%, 지방정부지출 -5.4%→-6.2%)

[그림 54] 미국의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산업생산은 9월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난 4개월간 지속되었던 증가세가 감소 전환**

- 전산업생산(전월비, %): ('20.7월)4.2→(8월)0.4→(9월)-0.6
- 제조업생산(전월비, %): ('20.7월)4.2→(8월)1.2→(9월)-0.8
-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지수는 10월 중 59.3로 전월(55.4)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ISM 비제조업지수는 56.6로 전월(57.8)에 비해 하락하며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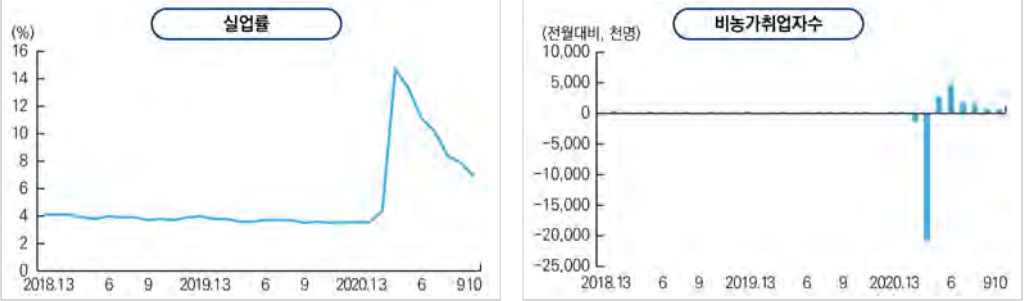
■ **소비관련 지표인 실질개인소비지출과 소매판매는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증가폭도 전월에 비해 확대되며 견실한 흐름이 지속**

- 실질개인소비지출(전기비, 연율)은 9월 중 15.9% 늘어 전월(8.9%)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1.9% 늘며 전월(0.6%)에 비해 호조
- 선행지수인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10월 중 100.9로 100을 상회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및 고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며 전월(101.3)에 비해 소폭 하락

■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하고 비농가취업자수도 전월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감**

-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90.6만명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 26.8만명 감소하여 전월대비 63.8만명 증가
- 실업률(%): ('20.8월)8.4→(9월)7.9→(10월)6.9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0.8월)149.3→(9월)67.2→(10월)63.8

[그림 55] 미국 주요 고용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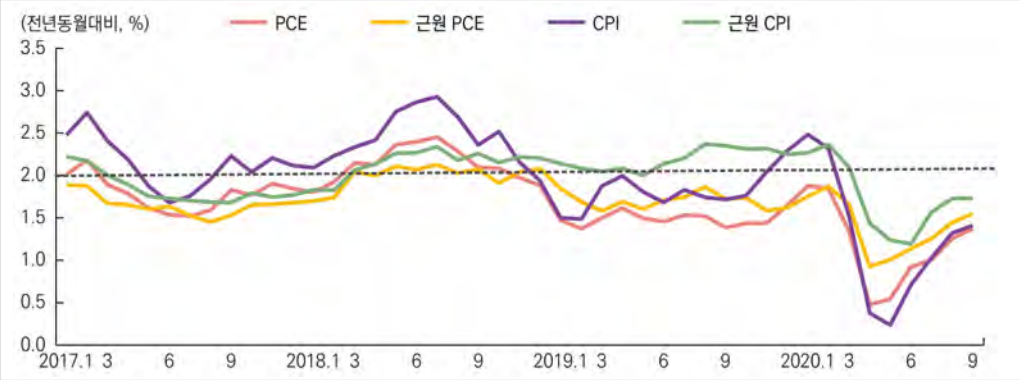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9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과 PCE물가상승률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1.4%로 전월에 비해 소폭 확대되며 지난 4월 이후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화가격과 서비스물가가 상승하며 전월(1.3%)에 비해 상승폭 확대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전월과 동일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근원PCE물가 상승률은 1.5%로 전월(1.4%)보다 0.1%p 확대

[그림 56]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추이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시장금리는 10월 중 10년물 국채금리가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에 대한 엇갈리는 전망으로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대선 직전에는 향후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 확보(Blue Wave) 전망으로 큰 폭으로 상승**

- 장단기 금리는 10월 들어 10년물 금리가 등락을 거듭하며 일평균 0.79%를 기록하여 전월(0.68%)대비 0.11%p 상승한 가운데 2년물 금리는 0.15%로 전월(0.13%)대비 0.02%p 상승하는 데 그쳐 기간금리차는 전월보다 0.09%p 확대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 %p): ('20.8월)0.51→(9월)0.55→(10월)0.64

[그림 57] 미국채금리 및 기간금리차 일별 추이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미연준은 지난 11.4~5일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현 수준(0.00~0.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향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금융상황을 반영하여 완화적인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

[바이든 인수위원회의 주요 정책]

■ **바이든 미 대통령 후보는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를 통해 향후 추진할 우선 정책(priorities)으로 4가지(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평등, 기후변화)를 제시**

- **(코로나19)** 검사 확충, 개인보호장비 공급 확대, 명료한 대응 지침 마련,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공급 물자 확보 등 주요 7가지 정책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 **(경제회복)**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활동을 제고하고 근로 가구, 중소기업, 지역사회의 경제 회복을 지원
  - 필요 인력 지원이 필요한 지방정부 지원, 실직자 지원을 위한 실직 보험 연장, 공공 의료 지원 단체 설립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으로 경제 활동 지원
  - 미국내 제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리 창출, 현대적인 사회기반시설 및 청정 에너지 미래 구축, 돌봄 및 보육 환경 개선과 교육 지원 인력 구축, 인종간 평등 제고 등으로 경제 회복 동력 확보
- **(인종평등)** 코로나19로 더욱 명확해진 인종 간 경제적 차별을 해소하고 기회평등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유색인종에 대한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 및 주택 지원,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종 간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연준 정책 강화
-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확대
  - 사회기반시설 재건과 청정 에너지 미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자동차, 대중교통, 청정에너지, 친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트럼프행정부가 2017년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

〈바이든 인수위원회 주요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코로나19	● 정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코로나19 무료 검사 기회 보장 - 검사용량 확대, 새로운 검사장비 개발 투자 확대, 공공 보건 일자리 단체 설립 ● 개인 보호 장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체 생산 확대 -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활용하여 마스크, 안면가리개 등의 개인보호장비 생산 확대 ● 충분한 자료에 기초하여 명료하고 객관적인 대응 지침과 물자 제공 - 지역사회, 학교, 지방정부 등이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료하고 객관적인 지침 마련
경제회복	● 미국내 제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리 창출 - 강력한 산업기반과 중소기업 중심의 공급망 구축으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 현대적인 사회기반시설 및 청정 에너지 미래 구축 -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시설과 성장 엔진에 대한 투자 확대 ● 21세기형 새로운 돌봄 및 보육 환경 개선과 교육 지원 인력 구축 - 보육 환경 개선,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 제고 ● 인종간 평등 제고 - 인종간 부(富), 주거환경, 교육 등의 격차 해소를 통해 인종차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축소

구분	주요 내용
인종평등	● 인종 간 경제적 보수 평등, 기회평등 제고 - 인종 간 보건 및 의료 서비스 불평등 해소 - 유색인종에 대한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 및 주택 지원, 교육 형평성 제고 - 인종 간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연준 정책 강화
기후변화	●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시설과 청정 에너지 미래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자동차, 대중교통,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도로, 다리, 녹지 공간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재건 - 전기자동차, 전기충전소, 무공해 대중교통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2035년까지 탄소제로 전력 생산, 주택 개선, 친환경 농업 확대, 환경 정의 실현

자료: 바이든 후보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priorities/)

2. 중국

중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등 실물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며 3/4분기 GDP성장률이 전기보다 확대

■ **중국의 3/4분기 GDP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9%를 기록하여 전분기(3.2%)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 GDP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0.1/4)-6.8→(2/4)3.2→(3/4)4.9
- 2020년 1/4분기 6.8% 감소 이후 2/4분기와 3/4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연간 누계기준 GDP성장률은 0.7% 플러스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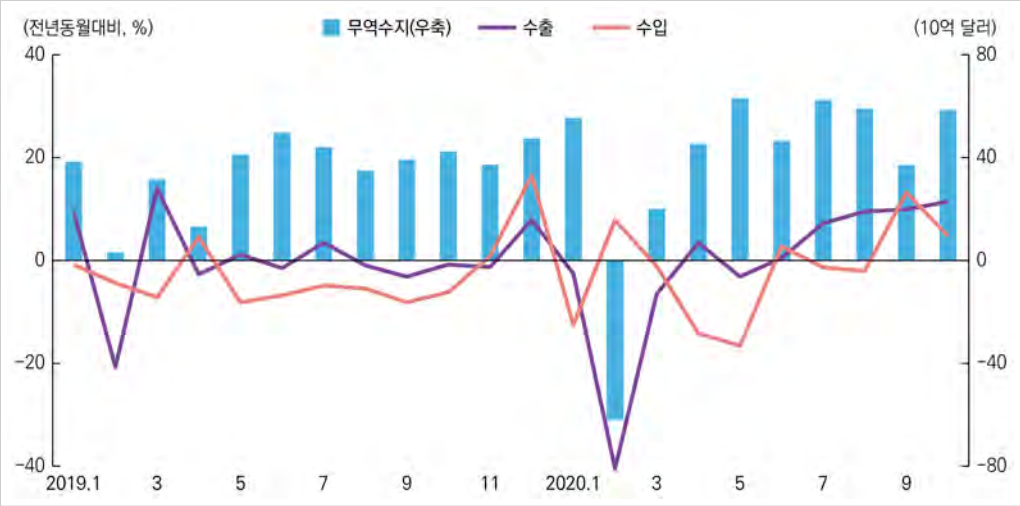
[그림 58] 중국 GDP 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 **10월 중 중국의 수출은 의료장비 및 전자제품 수요가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11.4% 증가하여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수입은 철광석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4.7% 증가하여 전월(13.2%)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수입 증가율이 전월보다 둔화되면서 무역수지는 584억 달러로 전월대비 증가

[그림 59]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Bloomberg

■ **소매판매는 곡물 및 식품, 음료수, 주류 및 담배, 의복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면서 전월(1.5%)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3.3%를 기록**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0.7월)-1.1→(8월)0.5→(9월)3.3
- 공산품판매(전년동월대비, %): ('20.7월)0.2→(8월)1.5→(9월)4.1

[그림 60] 중국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Bloomberg, 중국 통계국

[그림 61] 중국의 부문별 산업생산

자료: Bloomberg, 중국 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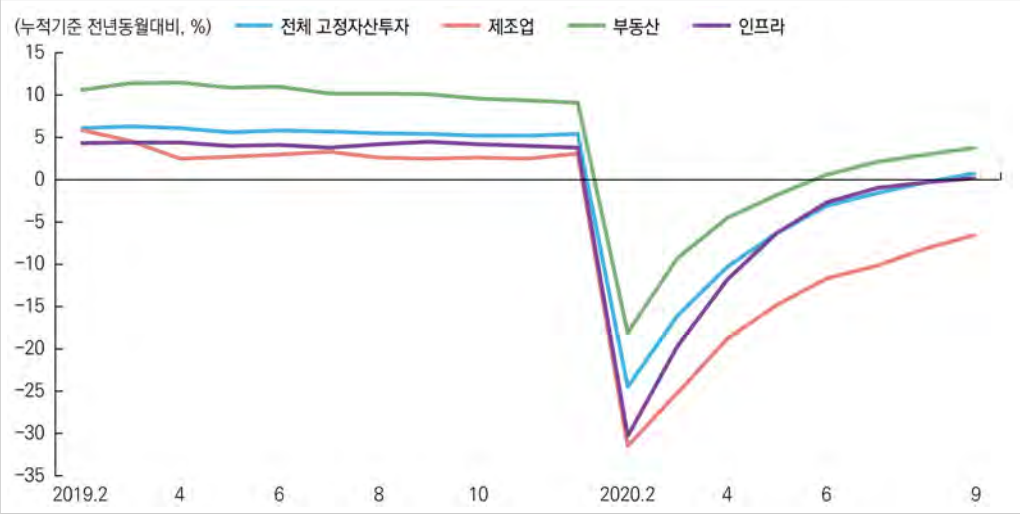
■ **9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제조업과 광업 모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월(5.6%)보다 높은 6.9% 증가율을 보임**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0.7월)4.8→(8월)5.6→(9월)6.9
- 제조업(전년동월대비, %): ('20.7월)6.0→(8월)6.0→(9월)7.6
- 광업(전년동월대비, %): ('20.7월)-2.6→(8월)1.6→(9월)2.2

■ **고정자산투자는 9월 중 제조업투자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부동산과 인프라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월 감소에서 증가 전환**

- 고정자산투자(전년동월대비, %): ('20.7월)-1.6→(8월)-0.3→(9월)0.8
- 제조업투자(전년동월대비, %): ('20.7월)-10.2→(8월)-8.1→(9월)-6.5
- 부동산투자(전년동월대비, %): ('20.7월)2.1→(8월)3.0→(9월)3.8
- 인프라투자(전년동월대비, %): ('20.7월)-1.0→(8월)-0.3→(9월)0.2

[그림 62] 중국의 부문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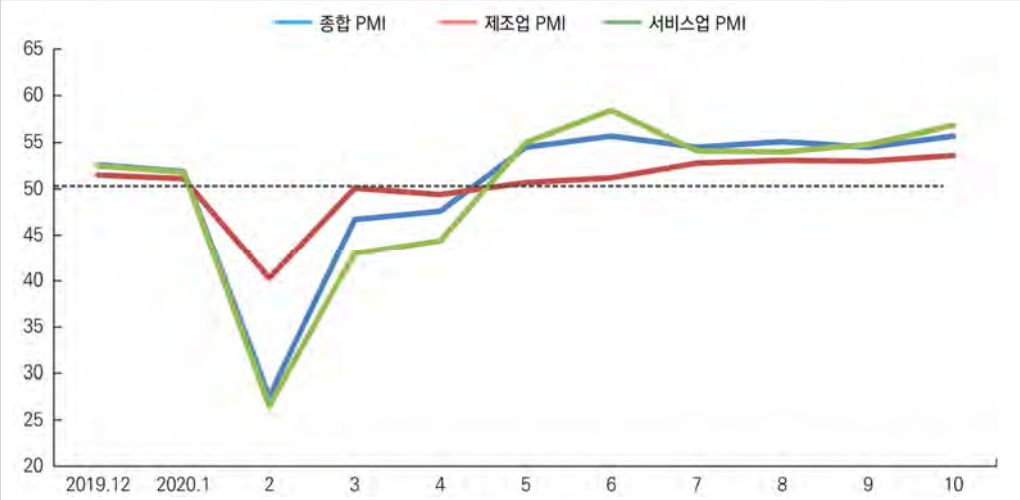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중국 통계국

■ **10월 종합 PMI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상승하며 전월(54.5)보다 상승한 55.7을 나타냈으며, 5월 이후 기준선(50)을 지속적으로 상회**

- 종합 PMI: ('20.7월)54.5→(8월)55.1→(9월)54.5→(10월)55.7
- 제조업 PMI: ('20.7월)52.8→(8월)53.1→(9월)53.0→(10월)53.6
- 서비스업 PMI: ('20.7월)54.1→(8월)54.0→(9월)54.8→(10월)56.8

[그림 63] 중국 PMI 추이



자료: Caixin/Markit, Bloomberg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의 3/4분기 GDP성장률은 큰 폭으로 반등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조치로 실물지표가 부진하고 심리지표 개선이 지연되는 등 다시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가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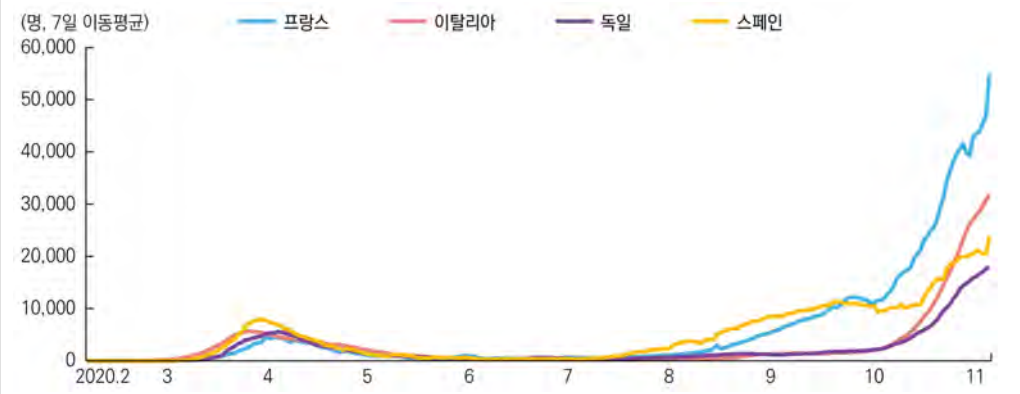
■ **유로지역의 3/4분기 GDP는 전분기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봉쇄조치 해제로 기업의 생산활동이 재개되면서 전기대비 12.1% 큰 폭 반등**

- 유로지역 GDP성장률(전기대비, %): ('20.1/4분기)-3.7→(2/4분기)-11.8→(3/4분기)12.7
- 유로지역 GDP성장률(전년동기대비,%): ('20.1/4분기)-3.3→(2/4분기)-14.8→(3/4분기)-4.3
- 주요 국가별 GDP성장률(전기대비,%): 프랑스(18.2), 스페인(16.7), 이탈리아(16.1), 독일(8.2)

[그림 64] 유로지역 GDP성장률 추이

자료: Eurostat

[그림 65] 유로지역 주요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추이



주: 7일 이동평균
자료: 유럽질병관리본부(ECDC)

■ **9월 중 소매판매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전월의 증가에서 2.0% 감소 전환**

- 전달 큰 폭으로 증가했던 섬유·의류·신발 판매와 메일 및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가 각각 7.6%, 5.5% 감소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0.7월)-1.7→(8월)4.2→(9월)-2.0
- 섬유·의류 및 신발 판매(전월대비, %): ('20.7월)-3.5→(8월)15.9→(9월)-7.6
- 온라인 판매(전월대비, %): ('20.7월)-10.5→(8월)12.7→(9월)-5.5

■ **산업생산은 4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8월 증가율은 이전대비 큰 폭 둔화**

- 산업생산(전월대비, %): ('20.6월)9.5→(7월)5.0→(8월)0.7

[그림 66]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omberg, Eurostat

[그림 67]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omberg,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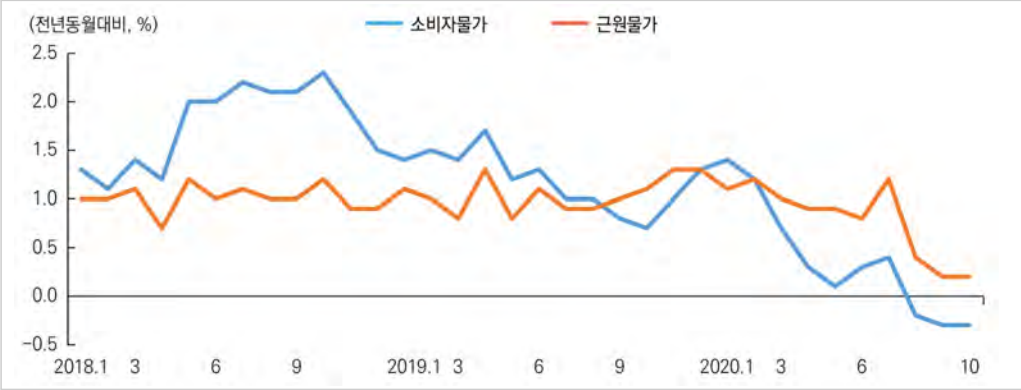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승세 지속

- 9월 중 유로지역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각각 8.3%, 17.6%를 기록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크게 늘어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보임
- 프랑스 실업률(%): ('20.7월)7.1→(8월)7.5→(9월)7.9
- 스페인 실업률(%): ('20.7월)16.5→(8월)16.7→(9월)16.5
- 이탈리아 실업률(%): ('20.7월)9.8→(8월)9.7→(9월)9.6

■ 10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가격이 내림세를 지속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공산품물가가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공산품물가 하락과 서비스물가 둔화 등으로 근원물가(에너지와 식료품 제외)상승률은 0.2%를 나타냄
- 에너지물가(전년동월대비, %): ('20.8월)-7.8→(9월)-8.2→(10월)-8.4
- 공산품물가(전년동월대비, %): ('20.8월)-0.1→(9월)-0.3→(10월)-0.1
- 서비스물가(전년동월대비, %): ('20.8월)0.7→(9월)0.5→(10월)0.4

[그림 68]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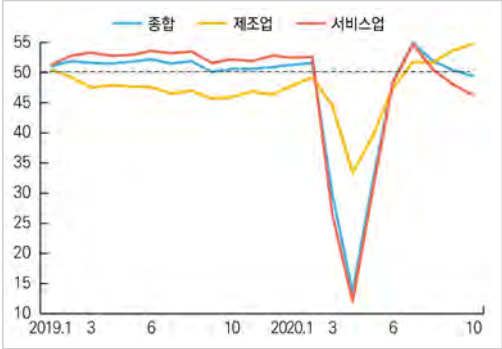


자료: Blooomberg, Eurostat

■ **10월 중 유로지역의 제조업 PMI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제한조치 강화 등으로 서비스업 PMI가 부진하여 전월에 비해 1.0 포인트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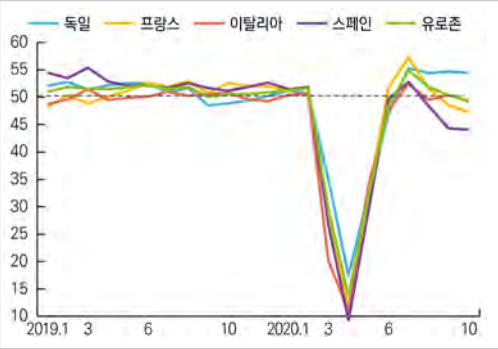
- 종합 PMI: ('20.7월)54.9→(8월)51.9→(9월)50.4→(10월)49.4
- 제조업 PMI: ('20.7월)51.8→(8월)51.7→(9월)53.7→(10월)54.8
- 서비스업 PMI: ('20.7월)54.7→(8월)50.5→(9월)48.0→(10월)46.2

[그림 69] 유로지역 PMI 추이



자료: Blooomberg, Markit

[그림 70] 유로지역 국가별 종합 PMI 추이



자료: Blooomberg, Markit

4. 일본

일본경제는 생산과 가계실질소비가 증가하였으나, 고용과 대외거래 부진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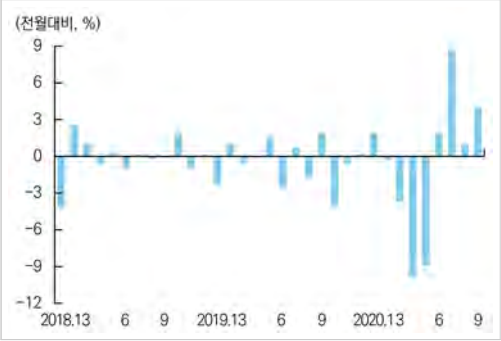
■ **9월 중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10.9%), 생산용기계공업(11.1%), 전자부품·디바이스공업(5.7%)이 늘면서 전월대비 4.0% 증가**

- 출하가 3.8% 늘면서 재고는 0.3% 감소(재고율지수는 3.7% 감소)

■ **9월 중 비농업취업자 수는 제조업(-39만명), 음식숙박업(-48만명)에서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55만명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0%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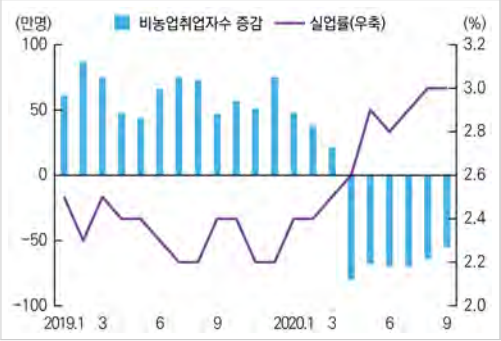
- 비농업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0.7월)-70→(8월)-64→(9월)-55
- 실업률(%): ('20.7월)2.9→(8월)3.0→(9월)3.0

[그림 71] 일본 광공업 생산증감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그림 72] 일본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총무성

■ **9월 중 소매판매액은 의복및신발(2.4%), 기계·기구(1.6%)에서 줄면서 0.1% 감소**

- 한편, 9월 중 가계실질소비지출(주거비 및 자동차구입비 제외)은 교육(-10.3%), 보건의료(-8.2%)에서 감소하였으나 식료품(5.8%), 수도·전기·통신(6.5%), 교양·오락(12.9%)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3.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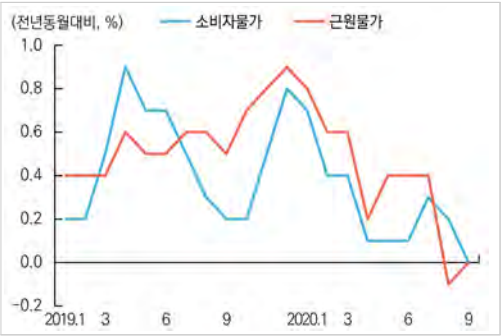
■ **9월 중 소비자물가는 신선야채(20.7%), 외식비(2.5%) 등이 상승하였으나 전기(-3.4%), 교양오락(-4.7%) 등이 하락하며 전년동월대비 0.0%를 나타냄**

-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또한 전년동월대비 0.0%를 시현

[그림 73] 일본 가계실질소비지출과 소매판매 추이

자료: 총무성, 경제산업성

[그림 74]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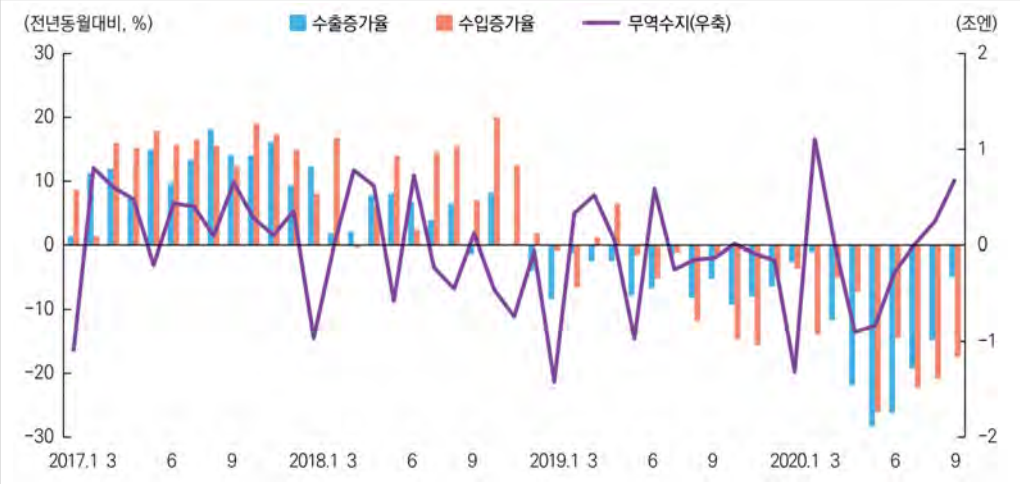


자료: 총무성

■ **9월 중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9%, 17.4% 감소**

- 수출 품목 중 원료별제품(-11.3%), 일반기계(-7.8%)에서 큰 폭 감소하였고, 수입 품목 중에서는 광물성원료(-38.7%), 전기제품(-16.5%) 등에서 큰 폭 감소
- 무역수지(억엔): ('20.7월)109→(8월)2,486→(9월)6,878
- 경상수지(억엔): ('20.7월)14,683→(8월)21,028→(9월)66,901

[그림 75]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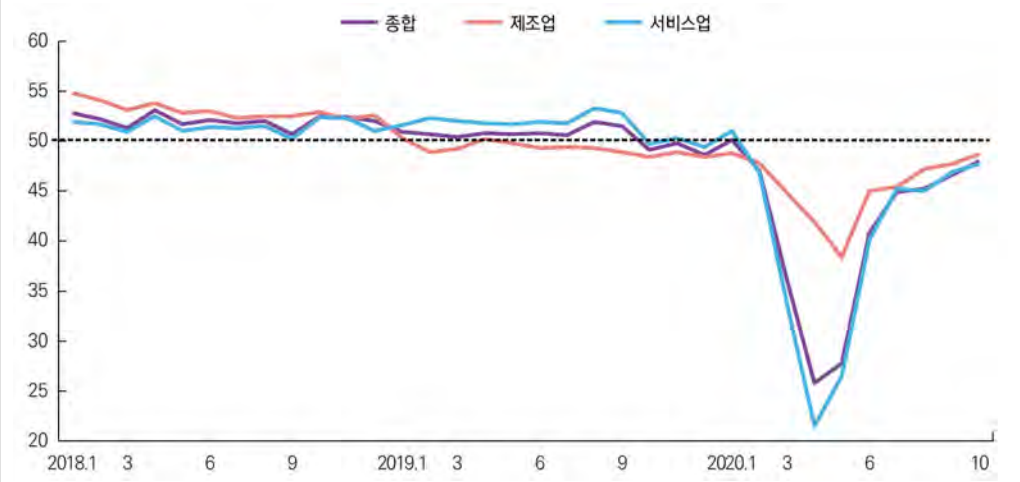


자료: 재무성

■ **10월 중 PMI(구매관리자지수)는 생산과 소비개선 등으로 상승하며 48.0을 나타내었으나, 여전히 기준선(50)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

- 제조업 PMI는 48.7, 서비스업 PMI는 47.7을 기록

[그림 76]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5. 브라질

브라질 경제는 생산이 회복되는 모습인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시현

■ 10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8% 상승

- 긴급재난지원금[8]이 식료품 구매에 집중되면서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했으며, 이는 정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목표 수준인 4%와 최근 3년 평균치인 3.2%를 초과

■ 9월 중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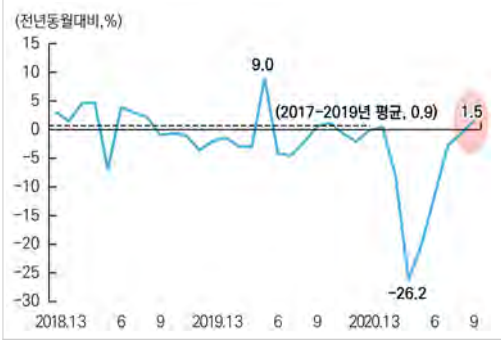
- 브라질 생산증가율은 중국경기 회복으로 자동차, 철강, 기계장비 분야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시현

■ 브라질 중앙은행은 9월 24일 발표한 3분기 경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4%에서 -5.0%로 상향[9]

[그림 77] 브라질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Datastream

[그림 78] 브라질 생산증가율



자료: Datastream

■ 10월 중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8.8% 감소했으며, 수입증가율은 27.3% 감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상반기 주요 교역국 수출은 중국(510억 달러, -6.5%), EU(300억 달러, -16.6%), 미국(232억 달러, -18.5%), 아르헨티나(73억 달러, -29.5%) 등 모두 감소
- 금년 상반기 중 브라질의 주요 수출 품목 증가율은 대두(-20%), 원유(-10%), 철광석(-9.3%), 쇠고기(-3.4%), 셀룰로오스(-3.1%) 등으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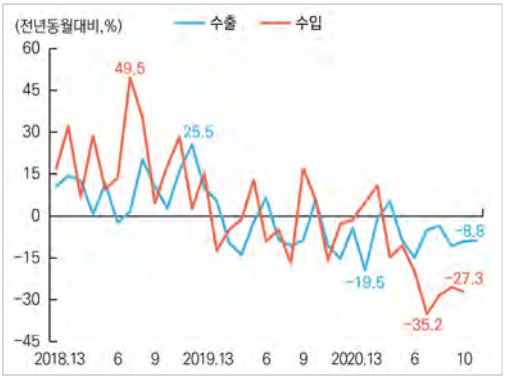
8) 브라질 정부는 2천 544억헤알(약 51조원)을 투입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빈곤층 등에게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매달 600헤알을 지급했으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300헤알을 지급하는데 약 1천억 헤알의 추가 재원을 투입할 예정

9)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2.5%, 2분기 -9.7% 기록

■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지난 8월 5일 2.00%로 0.25%p 인하된 이후 유지**

- 브라질 중앙은행은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2%로 동결
- 1996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수준[10)]

[그림 79] 브라질 수출·입 증가율



자료: Datastream

[그림 80] 브라질 기준금리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10) 다른 BRIICS국가 기준금리의 경우 러시아 4.25%, 인도 4.00%, 인도네시아 4.00%, 중국 4.35%, 남아프리카공화국 3.5%로 브라질이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

[전세계 코로나19 확산현황]

■ **11월 전세계 코로나19 확산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북미·중동 등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보다 심화되는 추세**

- WHO 집계 기준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1월 15일 현재 5,377만 1,510명이고, 일일 확진자 수는 59만 6,008명
  - 유럽·북미·중동 지역 등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일 확진자 수는 증가세를 지속
  - WHO의 지역구분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 지역은 "아메리카 〉 유럽 〉 동남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서태평양" 지역 순
  - 유럽 전역의 재확산 심화에 따라 유럽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동남아시아 보다 누적 확진자 수가 많아짐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및 일일 확진자 현황(11.1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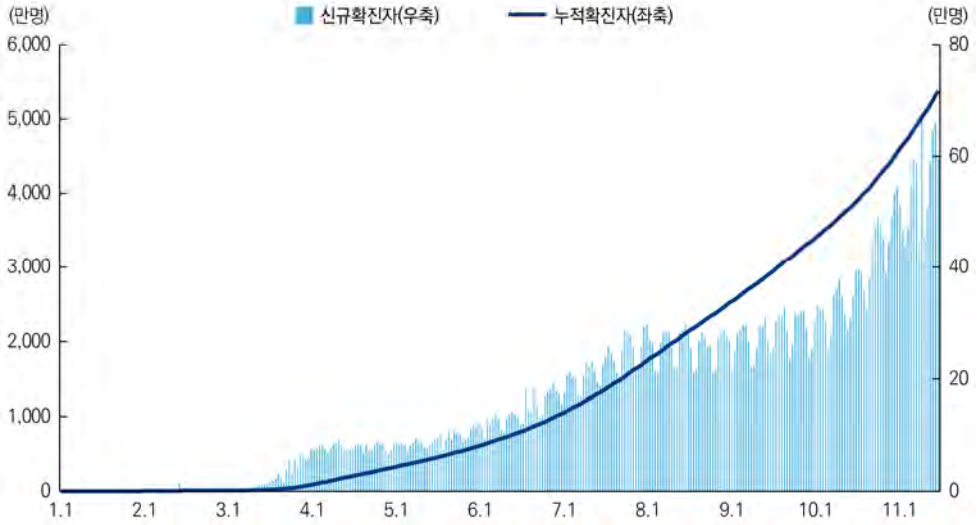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세계	아메리카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서태평양
확진 (일일)	53,771,510 (596,008)	22,960,102 (252,672)	15,052,771 (248,611)	10,015,731 (51,506)	3,545,801 (33,343)	1,398,935 (5,143)	798,170 (4,733)
사망 (일일)	1,309,113 (8,358)	675,735 (3,126)	341,639 (3,680)	153,860 (617)	90,052 (800)	31,450 (90)	16,377 (45)

주: WHO의 지역구분에서, 동남아시아는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 등의 지역을 의미하며, 서태평양 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및 호주 등의 지역을 의미

자료: WHO

〈전세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추이(11.1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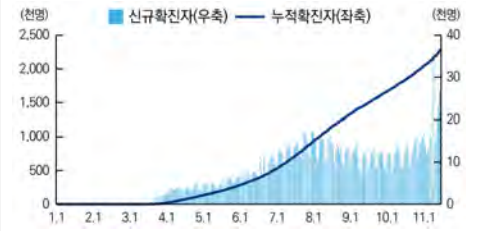


자료: WH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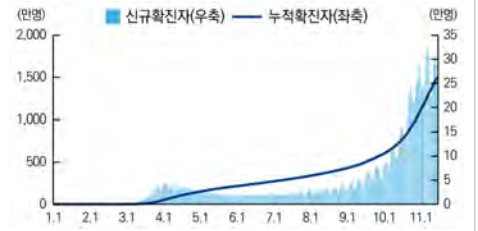
■ **주요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 인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북미·유럽·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되며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모습**

- **(아메리카)**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브라질·멕시코 등 남미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캐나다 등 북미는 확산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
- **(유럽)** 9월 이후부터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발생하면서 각국은 10월 말 이후 봉쇄령을 실시하였지만, 11월 초에도 확산세 유지
- **(동남아시아)** 인도·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9월 이후부터 일일 발생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11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추세
- **(중동)** 9월 이후 중동 지역의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며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현재에도 일일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
-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7~8월에 강한 확산세를 보인 후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11월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약한 증가세를 보이는 양상
- **(서태평양)** 중국·한국·일본 등 서태평양 지역의 경우 10월 이후 급격한 재확산이 나타나지 않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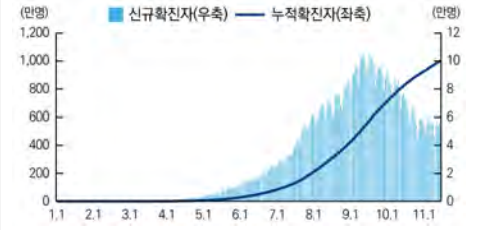
〈아메리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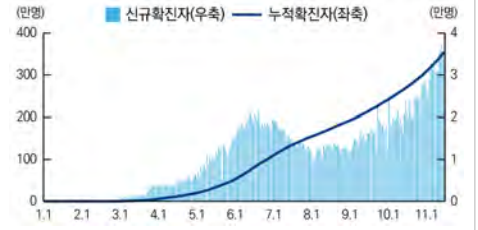
〈유럽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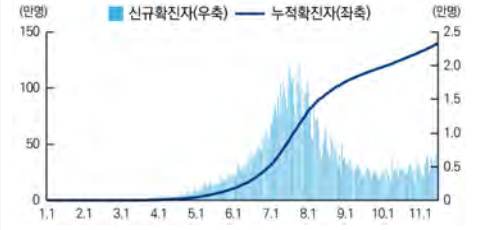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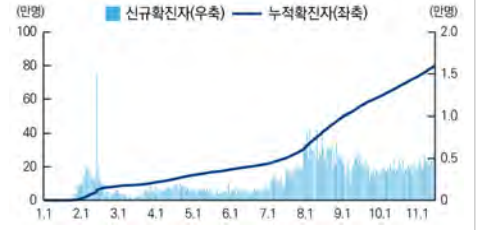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서태평양 지역〉



자료: WH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코로나19 전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수 현황(11.15. 기준)]

연번	국가	확진자 (명)	사망자 (명)	사망률 (%)
1	미국	10,641,431	242,542	2.3
2	인도	8,814,579	129,635	1.5
3	브라질	5,810,652	164,737	2.8
4	러시아	1,925,825	33,186	1.7
5	프랑스	1,918,345	43,913	2.3
6	스페인	1,458,591	40,769	2.8
7	영국	1,344,360	51,766	3.9
8	아르헨티나	1,296,378	35,045	2.7
9	콜롬비아	1,182,697	33,669	2.8
10	이탈리아	1,144,552	44,683	3.9
11	멕시코	997,393	97,624	9.8
12	페루	932,650	35,106	3.8
13	독일	790,503	12,485	1.6
14	이란	749,525	41,034	5.5
15	남아공	749,182	20,206	2.7
16	폴란드	691,118	10,045	1.5
17	우크라이나	535,857	9,603	1.8
18	벨기에	531,184	14,303	2.7
19	칠레	529,676	14,777	2.8
20	이라크	516,915	11,623	2.2
21	인도네시아	463,007	15,148	3.3
22	체코	458,229	6,058	1.3
23	네덜란드	441,927	8,432	1.9
24	방글라데시	430,496	6,173	1.4
25	터키	411,055	11,418	2.8
26	필리핀	406,337	7,791	1.9
27	파키스탄	354,461	7,109	2.0
28	루마니아	353,185	8,813	2.5
29	사우디아라비아	352,950	5,641	1.6
30	이스라엘	322,371	2,716	0.8
31	모로코	288,211	4,697	1.6
32	캐나다	287,318	10,828	3.8
33	스위스	256,186	2,956	1.2
34	포르투갈	211,266	3,305	1.6
35	네팔	208,299	1,215	0.6
36	오스트리아	198,216	1,629	0.8
37	에콰도르	179,627	12,997	7.2
38	스웨덴	177,355	6,164	3.5
39	카자흐스탄	160,612	2,306	1.4
40	아랍에미리트	149,135	528	0.4
41	파나마	144,477	2,856	2.0
42	볼리비아	143,069	8,835	6.2
43	요르단	141,305	1,704	1.2
44	헝가리	140,961	3,097	2.2
45	쿠웨이트	136,341	835	0.6
46	카타르	135,570	234	0.2
47	도미니카공화국	133,225	2,282	1.7
48	코스타리카	122,123	1,537	1.3
49	오만	119,442	1,326	1.1
50	아르메니아	117,337	1,763	1.5
51	일본	116,677	1,883	1.6
52	과테말라	114,719	3,920	3.4
53	벨로루시	112,870	1,039	0.9
54	이집트	110,547	6,442	5.8
55	레바논	104,267	806	0.8
56	에티오피아	102,321	1,565	1.5
57	온두라스	102,079	2,820	2.8
58	불가리아	97,435	2,091	2.1
59	베네수엘라	96,441	844	0.9
60	중국	92,428	4,749	5.1
61	몰도바공화국	88,772	2,006	2.3
62	슬로바키아	85,567	510	0.6
63	바레인	84,523	333	0.4
64	크로아티아	81,844	1,006	1.2
65	세르비아	81,086	989	1.2
66	조지아	79,678	703	0.9
67	튀니지	79,339	2,279	2.9
68	파키스탄	74,350	633	0.9
69	아제르바이잔	73,429	946	1.3
70	리비아	72,628	995	1.4
71	그리스	72,510	1,035	1.4
72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70,900	1,857	2.6
73	파라과이	70,392	1,556	2.2
74	우즈베키스탄	70,102	598	0.9
75	케냐	69,273	1,249	1.8
76	아일랜드	67,526	1,978	2.9
77	미얀마	66,734	1,534	2.3
78	키르기스스탄	66,504	1,199	1.8
79	알제리	65,975	2,125	3.2
80	나이지리아	64,996	1,163	1.8
81	덴마크	61,078	757	1.2
82	싱가포르	58,116	28	0.0
83	슬로베니아	54,122	500	0.9
84	가나	50,018	320	0.6
85	말레이시아	46,209	306	0.7
86	북마케도니아	46,062	1,281	2.8
87	아프가니스탄	43,035	1,605	3.7
88	푸에르토리코	41,772	921	2.2
89	엘살바도르	36,358	1,039	2.9
90	리투아니아	33,387	266	0.8
91	코소보	28,573	799	2.8
92	한국	28,546	493	1.7
93	호주	27,711	907	3.3
94	알바니아	27,233	612	2.2
95	노르웨이	27,226	294	1.1
96	몬테니그로	26,888	385	1.4
97	룩셈부르크	25,931	219	0.8
98	카메룬	22,692	433	1.9
99	코트디부아르	20,945	128	0.6
100	핀란드	19,102	369	1.9

자료: WHO

[주요 경제정책]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3(화)「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

-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50~70%), 주택 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
  - 시세가 9억원 이상인 주택들은 2019~2020년 공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나, 9억원 미만인 주택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가격대별 공동·표준주택 현실화율〉

(단위: %)

구분	전체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3억원	3~6억원	6~9억원		9~12억원	12~15억원	15~30억원	30억원~
공동	69.0	68.1	68.4	68.2	67.1	72.2	68.8	69.7	74.6	79.5
표준(단독)	53.6	52.4	52.7	52.2	52.4	56.0	53.4	53.7	56.0	62.4

- 다만,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조세 부담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
  -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90%) 도달기간을 다르게 하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 소유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인하(0.05%p)

    * 1주택자의 기준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기준을 참고하되, 보편과세인 재산세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할 예정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목표 도달기간〉

구 분	9억원 미만	9~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공동주택	10년 / 1,316.6만호 (95.2%)	7년 / 43.7만호 (3.2%)	5년 / 22.6만호 (1.6%)
표준주택	15년 / 20.7만호 (94.1%)	10년 / 0.9만호 (4.0%)	7년 / 0.4만호 (1.9%)
표준지	8년 / 50만필지		

주: 1. 재고량(호, 필지)은 2020년 공시기준임
2. 표준주택이란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직접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을 의미함

■ **당·정·청 회의를 통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결정(11.3일)**

- 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함
  - 특히, 2021년부터는 대주주 산정 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액을 합산

〈소득세법상 대주주 기준(양도소득세 대상) 비교〉

구분	'20.4.1 이전	'20.4.1 이후	'21.4.1 이후(정부안)
코스피	15억원	10억원	3억원
코스닥	15억원	10억원	3억원
비상장	15억원	10억원	10억원

주: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은 소득세법 개정 이후로 변화가 없으며, 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의 경우 2%, 비상장주식의 경우 4%임

- 그러나 일각에서는 ①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도입*, ②대규모 매도 물량으로 인한 주가시장 침체, ③가족합산으로 인한 과세표준 선정의 모호성 등의 이유로 현행기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원 이상인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됨

-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 11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하겠다고 밝힘

PART 2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현안

Ⅰ. 최근 국내경제 동향의 특징 ····· 62

Ⅱ. 국내외 ESG 채권시장 현황과 시사점 ····· 71

Ⅲ.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규제와 친환경차 지원 동향 ····· 77

Ⅰ. 최근 국내경제 동향의 특징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유승선** 경제분석관(6788-4658)

1. 수출·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률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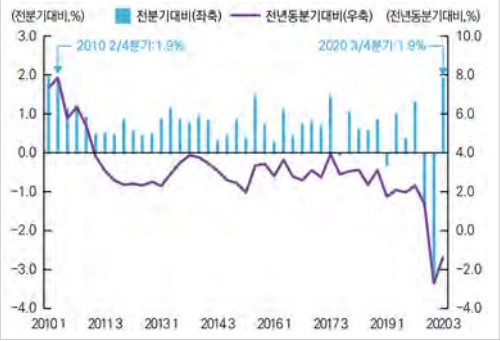
2020년 3/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기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1.9%를 기록하여 2010년 2/4분기 1.9%를 나타낸 이후 최고치(전년동기대비로는 -1.3%)**

■ **8월부터 재확산된 코로나19, 기상여건 악화(장마일수 증가, 태풍)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개선이 경제성장률 상승에 기여**

- 순수출과 설비투자가 각각 전분기대비 15.6%, 6.7% 증가하여 성장기여도가 각각 3.7%p, 0.6%p에 이름
- 앞선 2개 분기 연속 역성장(-1.3%, -3.2%)의 영향으로 기저효과가 큰 것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요인

[그림 1]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그림 2] 2020년 3/4분기 성장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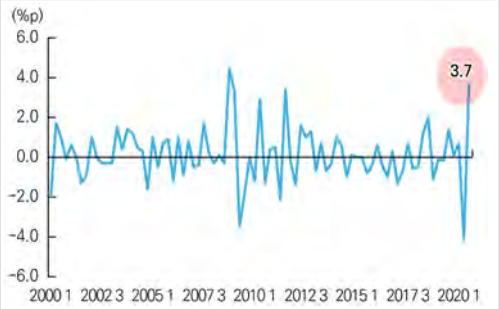
세계경제 수입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한 것이 경제성장의 주요인

■ **올해 3/4분기 수출(국민계정 상품 및 서비스)은 전분기 대비 15.6% 증가하여 분기기준으로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도 3.7%p에 이르러 2008년 4/4분기(4.5%p)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이는 상품수출(국제수지 기준)이 1/4분기, 2/4분기 각각 전분기대비 2.3%, 18.6%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세계경제의 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그림 3]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주: 국민계정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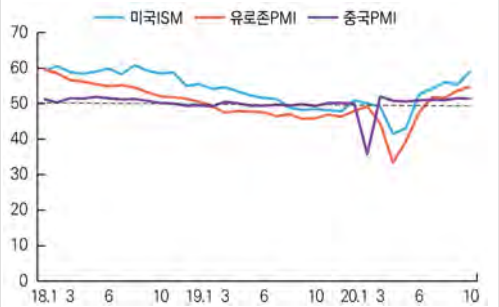
[그림 4] 상품수출의 전기대비 변동 추이

주: 국제수지 상품수출(계절조정)
자료: 한국은행

■ **3/4분기 들어 수출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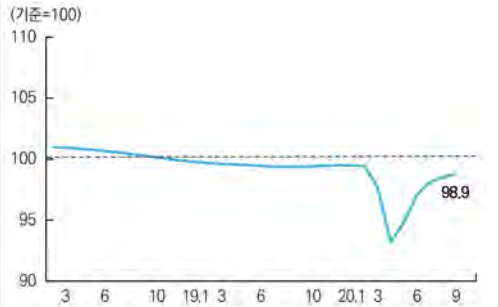
- 2020년 들어 큰 폭 하락했던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중국 PMI는 3월, 미국 ISM지수는 6월, 유로존 PMI는 7월부터 기준치(50)를 상회
- 또한 단기(6~12개월)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도 5개월째 상승세

[그림 5] 주요국 제조업 경기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CEIC

[그림 6]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 OECD

■ **3/4분기 국내수출의 특징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국가에 대한 전분기대비 수출 증가세가 높다는 점임**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25개국 중 전기대비 3/4분기 수출증가율(통관기준)이 10% 이상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11.8일 하루에 1천명 이상 발생한 국가는 12개국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2/4분기 대비 240.4%에 달하여 전체 수출증가율 18.2%를 크게 상회(비중은 전체 수출의 26.5%)

- 12개국이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2/4분기에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축소하자 수입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이것이 경제활동의 재개와 함께 3/4분기에 수입수요가 증폭되는 효과로 작용
- 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산활동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 7] 코로나19 확산국 및 전체 수출 추이

주: 통관기준(전기대비,계절조정치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8] 2020.8~9월 주요 품목 수출증가율

주: ( )은 20대 주요 수출품목 중 수출액 순위, OLED의 순위는 LCD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주목되는 점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을 이끌 주력 상품으로 신산업 제품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임**

-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선진국에서 재택근무가 권장되는 등 가정 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반도체, 컴퓨터, 가전, OLED 제품과 의료용품등 바이오헬스 제품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
- 수출액 상위 20대 수출 품목 중 최근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품목이 12개 품목인데, 이중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로봇, 정밀화학원료 등 신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출증가세가 기대됨
- 바이오헬스 수출의 경우 10월 중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초과(107.7억달러, 전년동기대비 45.8% 증가)

수출회복 및 경제환경의 변화가 설비투자를 자극

■ **설비투자(국민계정)는 세계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3/4분기 중 전분기대비 6.7%가 증가하면서 성장기여도가 0.6%p에 이르러 실질GDP성장의 31.6%를 차지**

- 이는 2012년 1/4분기(0.9%p)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그림 9] 실질GDP 및 설비투자 기여도 추이

[그림 10] 수출과 설비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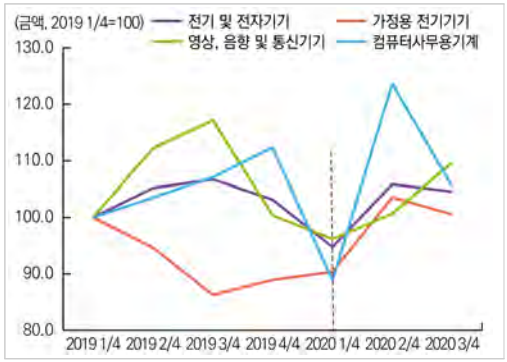
■ **설비투자의 회복요인으로 국내외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 활성화 등 환경변화를 들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에 기인한 사회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정 내 거주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반도체, 컴퓨터, 헬스바이오, 가전, 인테리어, 식품 분야에서 수출이 증가하자 이와 관련한 반도체제조장비, 제약설비 등 관련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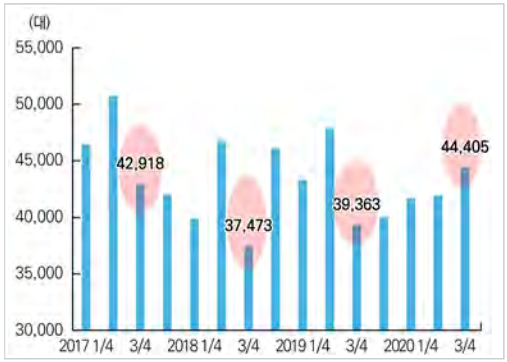
■ **개인이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여 무점포소매업(온라인쇼핑 등)의 매출이 급증하자 주문품 운송용 국내 상용차(트럭) 판매가 증가하여 설비투자 증가요인으로 작용**

- 2020년 3/4분기 트럭 판매량은 4.4만대로 4개 분기 연속 증가하였고, 최근 4년 내 3/4분기 판매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

[그림 11] 기계류 설비투자지수 추이



[그림 12] 국내제조 트럭의 국내판매 추이



주: 설비투자지수(통계청 작성)는 생산자기준가격으로 측정되는 반면 설비투자(국민계정)은 구매자가격 기준으로 작성되어 중간재의 유통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설비투자지수가 설비투자에 선행하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 과거 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 개선

과거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한 경제위기 상황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이 빠른 편

■ **저점으로부터 1개 분기가 경과한 3/4분기 실질GDP금액(계절조정)은 실질GDP금액이 가장 컸던 2019년 4/4분기의 97.5% 수준으로 회복**

- 실질GDP금액은 코로나19 이슈가 부각된 후 2개 분기가 경과한 2020년 2/4분기에 단기저점(2019년 4/4분기 실질GDP 대비 95.6%)을 형성

■ **외환위기(1997~1998년) 당시에는 충격발생 전 실질GDP금액(계절조정) 최고점(1997년 3/4분기)으로부터 저점(1998년 2/4분기)까지 3개 분기 소요**

- 저점에서 실질GDP는 최고점 대비 92.0% 수준까지 감소하여 충격이 매우 컸으며, 저점에서 1개 분기 경과 후 93.6%로 회복
- 이전 실질GDP 최고점까지 회복하는 데 4개 분기 소요

■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당시에는 이전 실질GDP금액(계절조정) 최고점(2008년 3/4분기)에서 1분기 만에 저점(최고점 2008년 4/4분기 대비 96.7%)을 형성**

- 저점으로부터 1개 분기 후에는 이전 실질GDP 최고점의 96.7%(2009년 1/4분기)로 회복
- 이전 실질GDP 최고점을 회복하는 데에는 3개 분기 소요

■ **과거 위기와 비교해 볼 때 만약 실질GDP 증가세가 가속화되어 이전 최고점(2019년 4/4분기)을 2개 분기 만에 회복하는 경우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 가능하나 현재 여건으로는 불확실성이 상존**

- 이전 최고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4분기에 전분기대비 2.6%의 성장이 필요

[그림 13] 최근 실질GDP 추이

[그림 14] 3대 경제위기 당시 실질 GDP금액지수 추이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3. 소비심리 회복을 어렵게 하는 서비스·고용지표 부진

코로나19가 비대면 관련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으나 서비스업과 고용에 대한 충격으로 전반적으로 민간소비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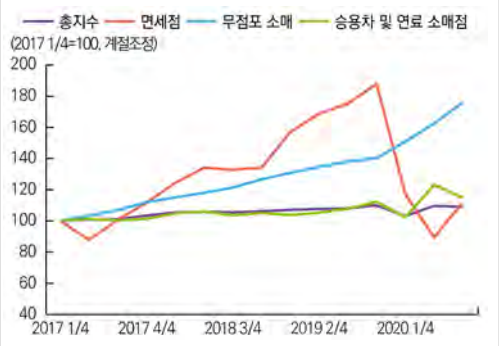
■ **민간소비(국민계정)는 2/4분기 중 5월 재난지원금 지급(약 14.2조원)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1.5% 증가했으나 3/4분기에는 0.1% 감소**

- 3/4분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패키지의 직접 지원금 규모가 1차에 비해 축소
- 8월 하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이 소비를 제약

■ **소매매출액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충격이 업태별로 상이하게 작용**

- 백화점, 편의점, 전문소매점 등 전통적 소매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
- 국가 간 여행입국규제로 인해 관광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면세점이 급격히 위축된 반면 소비자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을 기피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 무점포소매업의 매출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특징
- 또한 2020년 1/4분기에 코로나19 충격으로 감소했던 승용차판매가 2/4분기~3/4분기 중에 개별소비세 인하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4/4분기)을 회복

[그림 15] 소매업태별 상품판매액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6] 경제활동별 실질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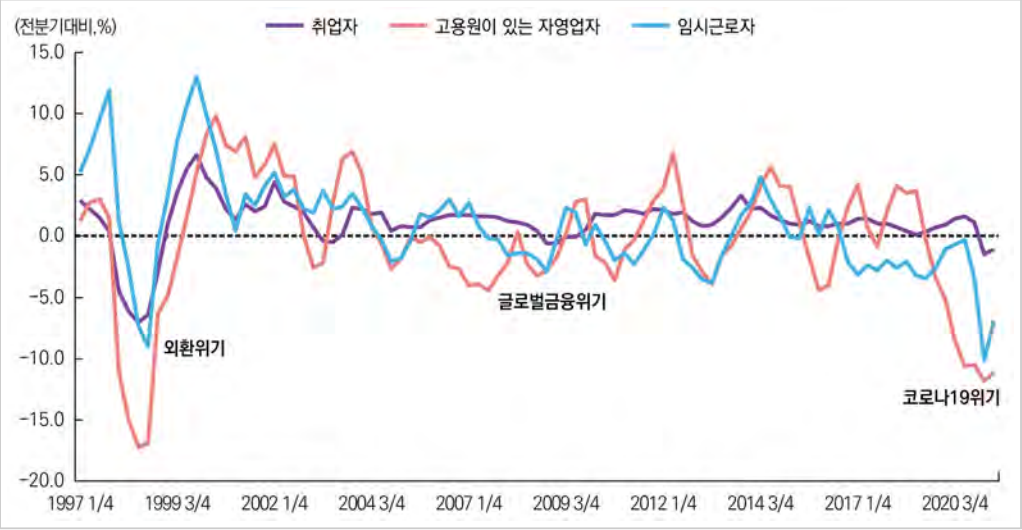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제조업에 비해 성장세가 안정적인 서비스업도 2020년 들어 현저히 위축되고 있어 민간소비 부진의 심각성을 반영**

- 2020년 2/4분기 서비스업 생산이 이전 최고점(2019년 4/4분기) 대비 3.3% 감소하여 외환위기(-6.2%)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 감소

- 서비스업 침체의 골이 깊을수록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데 외환위기 당시 서비스업이 전고점 회복에 4개 분기가 소요
-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자영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침체는 민간소비의 침체를 의미

[그림 17] 취업자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 **자영업자와 임시직 근로자의 취업자 감소율이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민간소비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19로 올해 1/4~3/4분기 평균 취업자 감소율이 전년동기대비 0.5%를 기록
- 특히 올해 1/4~3/4분기 중 평균 임시근로자의 감소율은 6.8%에 이르러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넘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취업자와 일용근로자 감소율은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한 각각 11.1%, 7.3%를 나타냄
- 이는 자영업자와 임시직 근로자(2019년 기준 비중 28.6%)가 코로나19 충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음을 의미

[표 1] 우리나라 경제위기별 평균 취업자 증가율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위기	비 중 (2019년 기준,%)
기 간	1998 2/4~4/4	2009 1/4~3/4	2020 1/4~3/4	
전체 취업자	-6.5	-0.4	-0.5	10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4	-1.5	-11.1	5.7
임시근로자	-6.3	-0.3	-6.8	17.7
일용근로자	-7.5	-6.2	-7.3	5.2

주: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증가율이 최저치를 보인 분기 포함 전후 3개 분기의 평균치

코로나19가 민간소비에 주는 충격의 경로가 과거 위기와 상이하여 과거에 비해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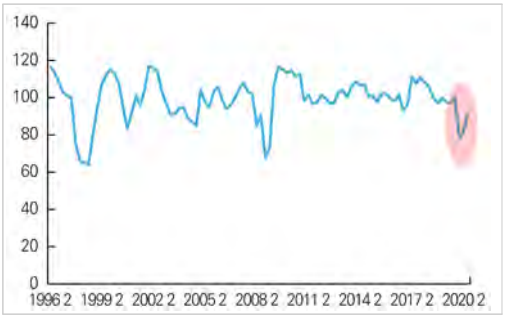
■ **2020년부터 나타난 코로나19 확산 시에는 소비심리가 감염위험기피경향에 따른 1차 충격(국내 소비 감소)에 이어 경제적 위축(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2차 충격이 발생하여 충격이 중첩**

- 과거 위기(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경제적 위축이 발생하면 가계가 실업위험 및 소득감소를 예상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경로를 거치며, 충격의 완화와 함께 소비심리도 빠르게 회복

■ **따라서 과거와 같이 위기 후 소비심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충격 완화뿐만 아니라 감염위험이 현저히 낮아져야 하지만 코로나19의 통제시점이 불투명**

- 또한 가계부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국민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8년부터 하락세에 있어, 민간소비 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

[그림 18]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분기말 값이며, 2020년 3/4분기는 10월 자료임. 2008 3/4분기부터 지수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
자료: 한국은행

[그림 19] 가계신용 지표 추이

자료: 한국은행

4. 시사점

미국과 유럽 선진국 등 세계경제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선진국의 수입수요 증가세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프랑스, 독일 등이 다시 외출금지, 부분 영업금지 등 조치를 단행하여 경제가 다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보급되기까지 높은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지속

■ 다만 우리나라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강국임을 감안 시 주요국의 완만한 수입수요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새로운 경제산업환경에 부합하는 신산업에서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음

■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로봇 등의 신산업 품목이 코로나19 이후 국내 수출회복을 주도할 가능성

■ 창의적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코로나19 위기의 해소 시까지 민간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

■ 민간소비의 위축이 자영업과 서비스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파산위험에 노출되면 다시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

- 서비스업과 민간소비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 부진으로 서비스업 회복이 지연되면 경기회복도 지연

■ 자영업에 고용된 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실업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

Ⅱ. 국내외 ESG 채권시장 현황과 시사점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진익** 과장(6788-3780)

1. ESG 채권 개념 및 요건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투자는 운용과정에서 재무 정보와 함께 비재무 정보도 활용하는 투자방식임[1)]

■ **비재무 정보는 재무 정보(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 이외의 정보를 통칭함**

- 비재무 정보의 주요 범주는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이며, 해당 범주를 포함함에 따라 ESG 투자로 불림

■ **재무 정보가 미래 성과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충실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라 운용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ESG 정보도 활용**

- ESG 투자는 투자과정(투자정책 수립, 위험수준 설정, 투자전략 실행, 투자성과 평가)에서 비재무 정보에 해당하는 ESG 정보의 활용을 표방함
- 자산가치 평가, 투자대상 선별, 포트폴리오 구성, 위험관리 등에 ESG 정보를 활용하는지 여부, 그 범위 등을 사전에 공시

글로벌 채권시장에서는 관련 기구, 협회 등에서 제정한 ESG 채권 요건이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관련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 기준 등이 없는 상태임[2)]

■ **채권 발행 관련 4개 핵심 요건(자금의 용도,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사후보고)을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 가이드라인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 ICMA)에서 제정한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GBP)
- 사회적채권과 관련하여 사회적채권원칙(Social Bond Priciples, SBP),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SBG) 등

■ **기후채권이니셔티브(Climate Bond Initiative)의 기후채권표준(The Climate Bond Standards, CBS)은 녹색채권으로서의 요건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

---

1) 국회예산정책처, "ESG 투자 관련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 「경제동향&이슈」 제68호, 2018.
2)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채권, 테마(Thematic) 채권, 사회공헌 채권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음.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플랫폼 (http://sribond.krx.co.kr)

- 자금사용·추적·보고 관련 의무사항, 사업·자산의 적격성 관련 기준, 독립적 검증 절차 관련 인증체계, 독립된 기구[3]에 의한 인증 등으로 구성

ESG 채권은 발행자금이 친환경, 사회적 이득 창출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특수 목적 채권으로서 발행절차에서 일반적인 채권과 차이가 존재

■ 글로벌 채권시장에서는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으로 유형을 구분

- 녹색채권(Green Bond)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이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사회적채권(Social Bond)은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은 녹색채권으로서의 목적사업과 사회적채권으로서의 목적사업을 동시에 갖는 채권

■ 일반채권과 달리 관리체계, 외부검토, 사후보고, 제3자 검토 등의 요건이 존재

- 관리체계(framework)는 자금의 용도,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사후 보고 등의 핵심 내용을 포함
- 외부검토(external review)는 ESG 채권 관리체계가 적용기준(GBP, CBS, SBP, SBG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 사후보고(reporting)는 자금사용 현황, 환경적·사회적 효과 등을 포함

■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ESG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일반 채권 대비 ESG 채권이 갖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표 1] 일반 채권 대비 ESG 채권의 장단점

	발행자	투자자
장점	• ESG 투자 관련 수요 확보 • 사회적 책임 관련 이미지 제고 • 책임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	• 공익성과 함께 안정적인 투자수단 • 자금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투자위험 관리에 유리 • 투자다변화 기회로 활용 가능
단점	• 일반 채권 대비 사전인증, 사후공시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발행원칙 불이행에 따른 신뢰훼손, 명성추락 등의 위험 존재	• 일반 채권 대비 유동성이 낮아 시장거래 기회가 제한적 • ESG 채권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자료: 강윤식, 정재만, "ESG 채권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아태비지니스연구」, 2020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대표적인 예는 기후채권표준 이사회(Climate Bond Standard Board)임

2. ESG 채권시장 현황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최근 3년 동안 ESG 채권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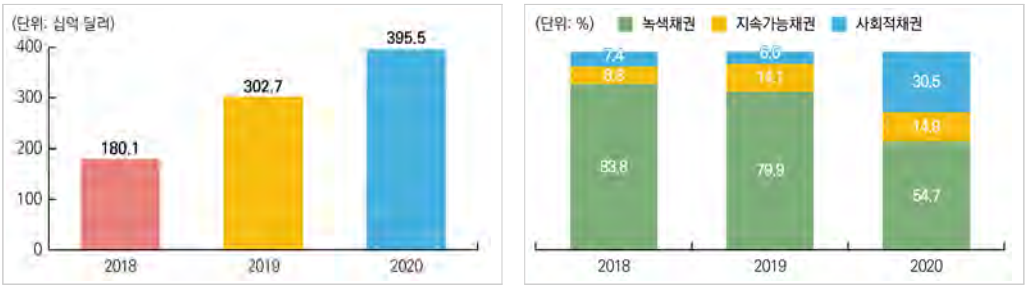
■ **2020년 10월말 기준 ESG 채권 발행 규모는 약 3,955억 달러로 2019년 한 해 동안의 발행 규모(약 3,027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음**

- 녹색채권의 2020년 발행 규모는 약 2,161억 달러이며, 3개 유형 중 비중은 약 54.7%로 가장 높으나 2019년 비중(약 79.9%) 대비 하락
- 지속가능채권의 2020년 발행 규모(약 587억 달러)는 2019년 발행 규모(약 428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이며 3개 유형 중 비중은 약 14.9%임
- 사회적채권은 2020년 발행 규모(약 1,206억 달러)가 전년 규모(약 180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하여 3개 유형 중 비중도 약 30.5%로 상승
- 사회적채권의 증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고용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pandemic bond)의 발행에 기인(약 750억 달러)[4]

■ **국제금융기구, 각국 정부, 공공기관 등의 ESG 채권발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

- 2020년 9월 독일 정부가 녹색채권을 처음 발행(65억 유로)하였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24억 유로)[5]
- 2020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회원국의 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목적으로 사회적채권(약 170억 유로)을 발행[6]
- 2017~2019년 동안 7개국(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폴란드, 프랑스, 홍콩) 정부가 녹색채권을 발행한 바 있음[7]

[그림 1]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 및 ESG 채권 종류별 비중



주: 2020년은 11월 4일 기준
자료: Bloomberg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CBI(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채권 대부분(약 90%)은 중국에서 발행됨
5) Bloomberg 집계 기준
6) 해당 사회적채권의 명칭(SURE: 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이 그 발행목적을 잘 보여줌.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EU 집행위, SURE 재원 조달을 위한 170억 유로 규모 사회적 채권 발행(10.20)」, 2020.10.26.)
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5억불 규모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 신뢰 확인」, 2019.

2020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외화 ESG 채권 발행 규모는 약 62억 달러임

■ **2020년 상반기 기준, 전체 외화 채권 대비 ESG 채권 비중은 약 28%임[8)]**

- KB국민은행 지속가능채권(5억 달러), NH농협은행 사회적채권(5억 달러), 신한은행 코로나19 대응 목적 채권(4억 호주달러) 등이 주요 사례임

■ **외화 ESG 채권 발행주체는 국책은행, 공공기관, 시중은행, 기업 등임**

- 한국수출입은행이 2013년 아시아 금융기관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한 이후 2016~2017년 동안 연간 2~3 차례 녹색채권을 발행
- 2019년부터 외화표시 ESG 채권의 발행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2019년 6월 13일에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5억 달러)을 녹색 및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발행하였으며 발행금리는 약 2.18%였음**

한국의 원화 ESG 채권 발행 규모도 최근 2개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

■ **2020년 10월말 기준, 원화 ESG 채권 발행규모는 약 47조 원임**

- 사회적채권의 발행 규모가 약 43.6조 원으로 전체 대비 비중이 약 93%를 차지하며 지속가능채권은 약 2.5조 원, 녹색채권은 약 1.0조 원 수준

■ **채권 유형별로 보면 특수채는 약 43.8조 원이고 회사채는 약 3.2조 원임**

- 주요 발행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39.7조 원), 산업은행(1.2조 원), 한국장학재단(1.1조 원), 금융회사(3.1조 원), 비금융회사(0.4조 원) 등[9)]

[그림 2] 원화 ESG 채권 종류별 및 채권 유형별 발행 규모

주: 2020년은 10월 말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국제금융센터,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시장 전망: 외화채 발행, 코로나19 재확산과 미대선을 주목」, 2020.
9) ESG 채권의 누적 발행 규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62.34조 원, 산업은행 2.10조 원, 한국장학재단 2.05조 원, 예금보험공사 1.50조 원, 기업은행 1.35조 원, 우리은행 0.95조 원, 현대캐피탈 0.93조 원, 현대카드 0.69조 원, KB금융 0.50조 원, SK에너지 0.50조 원, 그 외 2.65조 원임.

3. 시사점

ESG 채권 발행을 위한 시장인프라로서 ESG 채권 관련 인증 요건, 사후관리 시스템, 정보공시 체계 등과 관련한 시장규율의 확립을 유도할 필요

■ **ESG 채권에 대한 투자(녹색금융, 사회책임투자, 지속가능투자 등)의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시장인프라 정비, ESG 국채 발행 등을 검토할 필요**

- 산업구조, 인구구조, 기후 등의 변화가 유발하는 경제·사회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ESG 채권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음

■ **민간 자율의 시장규율만으로 시장조성이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인프라 정비 차원에서 관련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평가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을 사용한 결과 동일 기업에 대한 ESG 점수가 기관별로 다르고 투자자들이 ESG 채권들을 상호비교하기 어려움[10)]

■ **ESG 채권 발행자가 채권 발행 시 공시한 목적사업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사후감시 체계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EU는 2020년 3월 기후법안, 녹색분류체계 최종안, 녹색채권 인증 요건 등을 공개하고 2021년 말 시행을 목표로 세부사항들을 보완하고 있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투입의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재정여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ESG 국채 활용 검토 가능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위기는 그 종결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향후 확장적 재정운용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

- 2021년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는 109.7조원 적자(GDP 대비 5.4%)이며, 중앙정부채무 중 국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2.1조원 증가[11)]

■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재정여력이 상당한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채 실효이자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여 정부부채비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 감소[12)]

---

10) Berg, et al.(2020)이 6개 ESG 평가기관(KLD(MSCI Stats), Sustainalytics, Vigeo Eiris (Moody's), RobecoSAM(SP Global), Asset4(Refinitiv), MSCI IVA)의 평가등급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분류 범위(scope), 측정(measurement), 가중치 등을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 평가결과도 서로 다르게 나타남. Berg, F., Koelbel, J. F., & Rigobon, R., "Aggregate confusion: the divergence of ESG ratings," *MIT Sloan School Working Paper 5822-19*, 2020.

11) 통합재정수지는 72.8조원 적자(GDP 대비 3.6%)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3조원 악화될 전망임.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 2018.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달러화 ESG 국채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련 이론분석을 참조하면 외평채가산금리는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 사이의 스프레드로서 국가 CDS 프리미엄과 같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13)]
- 2019년 6월 발행한 5년 만기 ESG 외평채의 동일 만기 미국 국채 대비 가산금리는 30bp로서 해당 시점의 CDS 프리미엄(32.8bp)보다 낮았음
- 일반 채권 대비 ESG 채권의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감안하면, 동 결과는 ESG 국채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컸음을 보여줌

12) 국채 실효이자율은 국채 이자부담률(=이자지급액/잔액 - 1)에서 명목경제성장률을 차감하여 추정할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코로나19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2020.

13) 금융시장에서 관측되는 외평채가산금리와 국가 CDS 프리미엄 사이 차이는 거래비용, 최저가인도옵션, 시장의 수급요인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Duffie, D., "Credit Swap Valuation," *Financial Analyst Journal* 55, 73-87, 1999.

III.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규제와 친환경차 지원 동향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허가형** 경제분석관(6788-4678)

1.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규제

최근 주요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위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내연기관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발표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전체의 약 25%를 차지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의 주 요인이며, 타부문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속도가 느리다고 설명하며[1] 완성차에 대해 강한 배출량 규제를 시행**

- 2021년 91g/km에서 2030년에는 56g/km로 낮추는 기준을 설정

■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기준보다는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2021년 97g/km 에서 2030년에는 70g/km 로 낮추는 규제를 시행**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까지 연평균 1.5%씩 연비를 향상시켜야한다는 규제를 발표하였으나[2],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비중을 크게 높이며 내연기관의 배출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행정부는 2025년까지 연평균 5%씩 연비를 향상시켜야한다고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전역에 50만개 수준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며 교통 시스템 자체를 전기차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계획

■ **이와 같은 규제는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효율 향상과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판매 비중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함**

[표 1] 주요국의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단위 : g/km)

연도	미 국	우리나라	유럽연합
2021년	110g/km	97g/km	91g/km
2025년	103g/km	89g/km	77g/km
2030년	미발표	70g/km	56g/km

주 1: 미국의 자료는 현재 기준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보다 강화할 전망
주 2: 수치는 국내 측정방법으로 환산한 값
자료 : 환경부

1) https://ec.europa.eu/clima/policies/transport_en
2) https://www.c2es.org/content/regulating-transportation-sector-carbon-emissions/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주요 국가는 장기적으로 내연기관 판매중단을 포함하는 내연기관차 축소 정책을 발표

■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승용차의 배출량 허용치 미달성시 1g에 대해 2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

-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의 대EU 수출 1위 품목이며 2019년에는 112억 달러(약 13조 1,432억원)를 수출한 주요 산업
-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는 적극적인 반면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은 자국 산업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임

■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주내 판매되는 모든 여객 운송용 신차는 무공해차량(zero emission vehicles)이어야 할 것을 규정[3)]**

■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발표하였으며 2035년부터 순수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

[표 2] 내연기관 판매금지 정책 동향

국가	내용
노르웨이	•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합의(2016.6) - 수도 오슬로에서 2017년부터 디젤 자동차의 일시 운행 금지 조치 - 일반승용차, 단거리 버스, 경량 트럭은 무공해 차량만
네덜란드	•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하원 통과(2016.4) - 신차에 대해서만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 - 법안 최종가결시,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강력 반대
덴마크	• 2030년 이후 신규 휘발유, 경유차 판매금지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는 2035년 이후 판매금지
아일랜드	•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등록 금지
인도	•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2017.6) -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유차는 수도 뉴델리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치
영국	•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금지 - 경유 차량에 대한 높은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
중국	• 2035년부터 순수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미래차 보급을 확대(2020.10) - 2019년부터 신에너지 차량(NEV) 크레디트 의무제를 시행하여 연 3만대 이상 내연기관차를 생산·수입하는 자동차 업체는 2020년부터 판매 차량의 12%를 미래차로 대체해야 함
프랑스	•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 발표(2017.7) - 1997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와 2001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 차량을 미래차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주고 내연기관을 점차 퇴출 - 파리는 2024년 디젤차, 2030년 휘발유차의 진입 금지
독일	•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2016.10) 연방하원 통과는 불발 - 자동차 산업이 독일 산업의 중추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
한국	• 2030년까지 전기차·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33% 까지 높일 계획 - 서울시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의 신규등록 및 운행 금지

자료: 에너지관리공단(2020)과 신문기사를 정리

3) https://www.gov.ca.gov/wp-content/uploads/2020/09/9.23.20-EO-N-79-20-text.pdf

2. 친환경차 지원 및 보급 동향

2019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10만대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2.6%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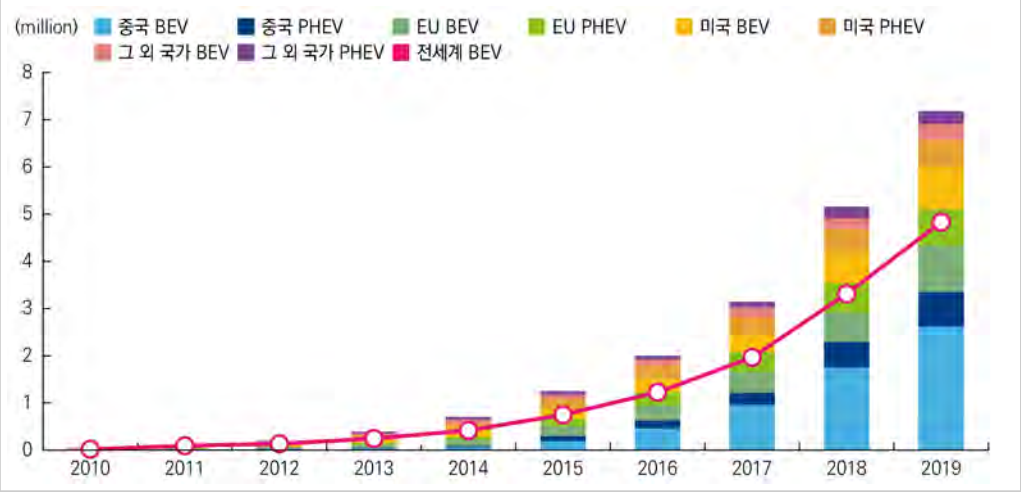
■ **전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규제, 지역대기오염 완화, 신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자동차 산업의 기술경쟁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 노르웨이는 2019년 신차 판매량의 59%가 전기차였으며 아이슬랜드는 24%, 네덜란드는 15%가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 비중은 5%이며, 영국, 독일, 프랑스는 3% 수준

■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으로 2019년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32만대였으나 중국에서는 120만대가 판매됨**

- 누적 전기차 판매순위는 중국, 유럽연합, 미국 순이나, 유럽의 경우 2019년 친환경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51.1% 증가한 150만대로 크게 상승

[그림 1] 국가별 전기차 판매대수 추이



주: BEV는 순수전기차,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의미
자료: IEA, Global EV Outlook 2020, 2020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지원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있음

■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구매보조금, 세액공제 등 경제적 유인과 함께 충전 인프라 확대, 전기차 이용 편의성 확대, 환경규제 강화 등 비경제적 유인을 조합**

■ **단,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구매지원금은 축소해가는 추세에 있음**

- 미국은 전기차 제조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이 20만대에 도달하면 보조금은 종료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
- 중국은 2022년까지 매년 10%씩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계획

[표 3] 주요국의 친환경차 지원정책

국가	지원정책
독일	2020년말까지 차량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16~19% 인하 및 보유세 면제 2021년말까지 친환경차 구매 장려금 6,750~9,000유로
프랑스	취득세 50% 감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3,000~7,000유로
영국	탄소제로 차량에 대해 취득세 및 보유세 면제 구매보조금 5,000유로 (차량 가격 50,000 유로 이하)
스웨덴	탄소제로 차량에 대해 도로세 감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10,000~60,000크로나 지원
이탈리아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2,500~6,000유로
미국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2,500~7,000의 세액공제
중국	주행거리 250~400km 이상인 전기차에 대해 약 337~463만원 지원
한국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국비 최대 900만원+지자체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 지원

자료: ACEA(EU), www.fueleconomy.gov/feg/taxevb.shtml(미국), 저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

3.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수출 동향과 기술경쟁력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무역액은 하락세인 데 비해, 친환경차는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5~2019년 동안 친환경차의 무역증가율은 연평균 81.1%로, 전세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3.2%와 우리나라 전산업의 무역 증가율 2.1%를 크게 상회**

- 2015년에 친환경차 무역액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4%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0.4%에서 2019년 4.7%로 5년 동안 크게 증가

[표 4] 세계무역과 미래차 무역동향

(단위 : 조 달러, %, 억 달러, %)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세계	무역액	33.3	32.0	35.3	39.1	37.7	
	(증가율)	-12.0	-3.9	10.4	10.9	-3.7	3.2
한국	전산업 무역액 A	9,633	9,016	10,522	11,401	10486	
	(증가율)	-12.3	-6.4	16.7	8.4	-8.0	2.1
	자동차산업 무역액 B	898	838	827	832	854	
	(증가율)		-6.7	-1.3	0.6	2.6	-1.2
	친환경차 무역액 C	3.6	3.3	9.7	22.0	38.7	
	(증가율)		-8.3	193.9	126.8	75.9	81.1
	친환경차/전산업(C/A)	0.04	0.04	0.09	0.2	0.4	
	친환경차/자동차(C/B)	0.4	0.4	1.2	2.7	4.7	

주: 친환경차는 통관분류 상 전기차(HS870380, HS870390), 플러그인하이브리드(HS870360, HS870370)를 의미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환경규제를 강화한 유럽에 등록된 특허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요는 앞으로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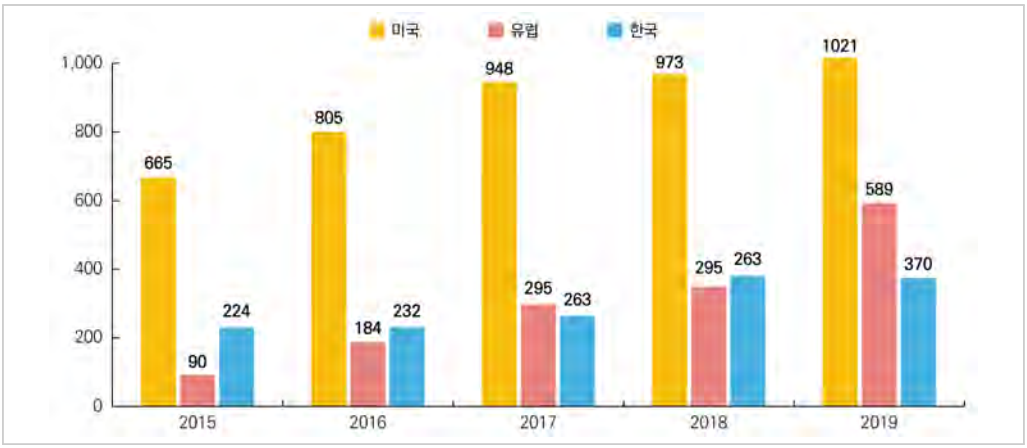
■ **미국, 유럽, 한국의 전기차 동력장치 관련 특허는 최근 5년 동안 모든 국가에서 증가세에 있으나, 유럽의 특허 성과가 가장 높음**

- 2015년~2019년 동안 유럽의 특허등록건수는 연평균 60%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13%나 미국의 11%를 크게 상회

■ **2016년까지는 국내 특허건수가 유럽보다 많았으나, 2019년에는 37% 적음**

- 유럽의 2019년 특허등록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국내 특허건수는 정체

[그림 2] 자동차 분야 주요 특허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주: 해외 특허등록건수는 특허청 심사관용 특실검색시스템내 검색으로 산출되었으며, 전기차 동력장치(B60L) 등을 의미함
자료: 특허청

4.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이 잇따르면서 친환경차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주요국의 정책 지원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 및 기술 확보가 필요**

-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생산의 12.1%, 부가가치의 9.4%, 직간접 고용의 11.9%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중요

■ **내연기관이 점차 시장에서 밀려남에 따라 관련 부품업체의 구조조정과 산업전환 방안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

- '미래차 시대 대응 실태조사'결과 국내 185개 자동차 부품사 중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 또는 개발 중인 기업은 40%에 불과하며,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미래차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친환경차의 핵심부품 기술력 확보와 부품 생태계 조성이 필요

■ **차량용 반도체, 이차전지, 연료전지 및 수소저장장치 등 관련 부품과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친환경차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S/W 및 운행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필요**

PART 3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이슈

Ⅰ. 모성보호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 84

I

모성보호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김승현·유근식** 경제분석관(6788-4751)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2015년까지 증가하다 합계출산율 감소로 인해 소폭 감소

■ **모성보호제도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육아의 부담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반보호조치로, 본고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한정하여 사용**

■ **2019년 모성보호제도 이용자는 17만 9,274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18만 2,598명에 비해 소폭 감소(-1.8%)하였으나, 2019년 지원실적은 1조 3,286억원으로 2015년 8,787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51.2%)**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취업 여성의 출산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취업 여성의 출산확률은 비취업 여성 대비 약 4%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출산의사가 낮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결과는 취업이 출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상관관계로 해석할 필요

■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의 제공은 비취업 여성 대비 취업 여성의 낮은 출산확률을 약 34.3%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석**

모성보호제도가 취업 여성의 출산확률을 증가시키지만, 제도 활용도가 높지 않으므로 모성보호제도 사용 현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남성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모두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용률 또한 높지 않은 수준이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 2019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 수는 400.3만명으로 여성근로자 전체(685.7만명) 대비 58.4% 수준이며, 여성 근로자 중 일부만이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개인단위로 연계하여 근로감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자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육아는 부모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아래 남성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

1. 모성보호제도 개요

모성보호제도*는 일·가정양립 지원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모성보호제도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육아의 부담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①출산전후휴가, ②육아휴직,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구분(고용노동부)

■ **본고에서는 제도의 대표성 및 자료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모성보호제도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한정하여 사용**

[표 1]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개요

	대상자	기간	급여액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출산 전후로 90일, 120일[1]	• 정부가 최대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2]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최대 1년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3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주: 1.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이며, 대규모기업인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모성보호제도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2015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합계출산율 감소로 인해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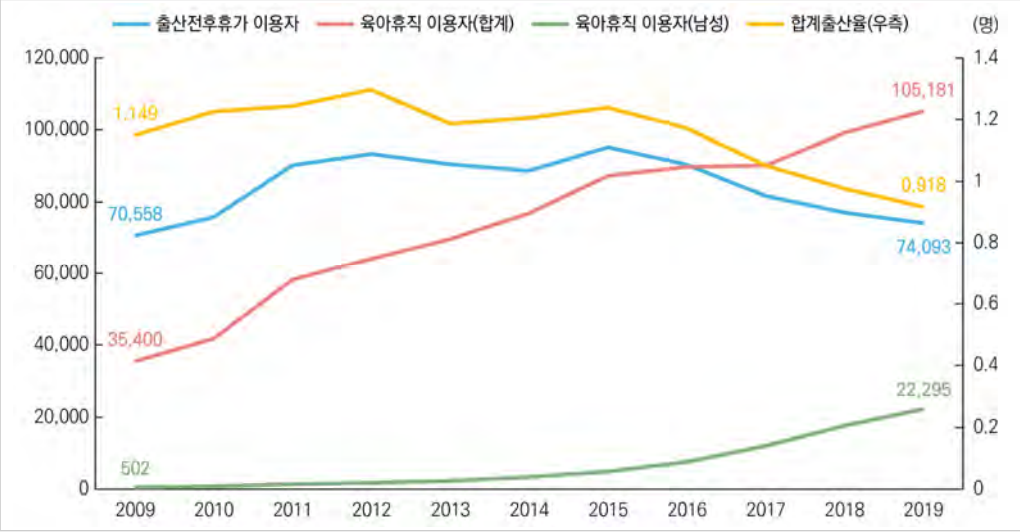
* 모성보호제도 이용자는 고용보험 DB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및 육아휴직 급여 초회수급자를, 지원실적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의미

■ **2019년 모성보호제도 이용자는 17만 9,274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18만 2,598명에 비해 소폭 감소(-1.8%)하였으나, 2019년 지원실적은 1조 3,286억원으로 2015년 8,787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51.2%)**

- 임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전후휴가는 이용자가 합계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용자가 증가 추세
-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2009년 502명에 불과했으나, 일·가족 양립정책의 확대 및 2014년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특례제도'아빠의 달'[1]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2,295명으로 40배 넘게 증가

1)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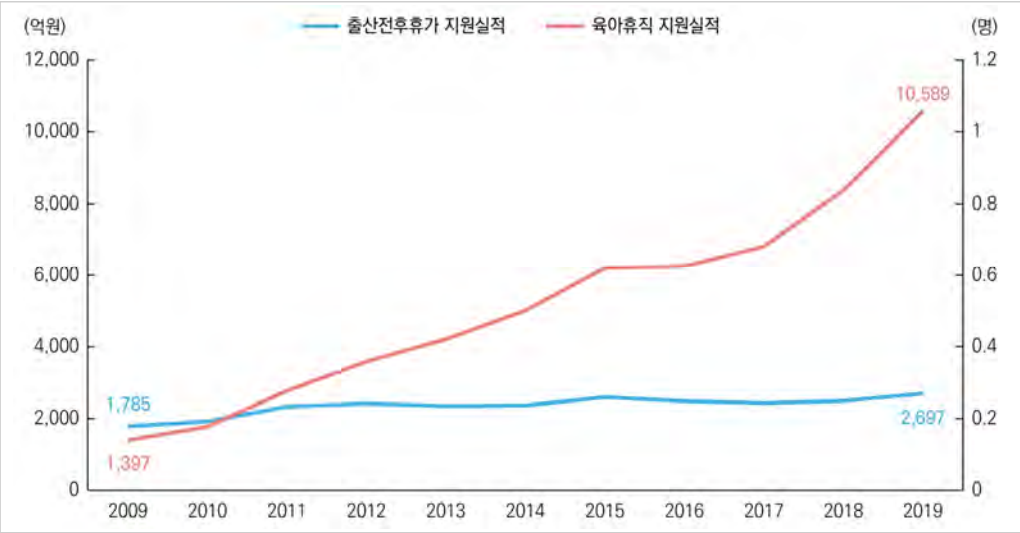
[그림 1] 출산전후휴가 이용자 및 육아휴직 이용자 추이



자료: 고용보험 DB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실적은 휴직급여의 월 상·하한액 확대 및 소득대체율 상승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육아휴직 지원실적이 2009년 1,397억원에서 2019년 1조 589억원으로 6.58배 증가

[그림 2] 출산전후휴가 지원실적 및 육아휴직 지원실적 추이



자료: 고용보험 DB

[표 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변화

		2007.10	2010.12	2017.8[1]	현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50만원	40%	80%, 40%	80%, 50%
	월 상한액		1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20만원
	월 하한액		50만원	70만원, 50만원	70만원, 70만원
		2007.10	2014.6	현행	
출산전후휴가	소득대체율	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월 상한액	405만원	405만원, 540만원[2]	540만원, 720만원[3]	

주: 1. 왼쪽은 육아휴직 첫 3개월, 오른쪽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를 의미
2, 3. 다태아를 임신했을 경우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 **모성보호제도 지원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 0.918명으로 1명을 하회하였고, 2020년 1분기 및 2분기 합계출산율은 각각 0.9명, 0.84명으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9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2. 선행연구 검토

기존 연구는 대부분 여성고용률 제고 관점에서 모성보호제도 또는 일·가정양립 정책을 분석하였고 출산율 제고 관점에서는 거의 분석하지 않음

■ **모성보호제도 또는 일·가정양립 정책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분석 결과가 대체로 긍정적이나 뚜렷한 방향성을 띄진 않음**

- 장지연 등(2013)[2]은 2007년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2011년 정률제 전환을 정책변수로 설정하고,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고용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률제 전환 이후 여성 고용감소폭이 적게 나타났으나 동일직장 유지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함

2) 장지연·윤자영·신현구,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효과 강화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재설계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3

- Ruhm(1998)[3]은 유럽 9개국을 대상으로 1969년부터 1993년까지의 유급육아휴직이 여성 및 남성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유급육아휴직은 여성 고용을 증가시켰으나 여성의 상대임금을 감소시키기도 함

■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모성보호제도 또는 일·가정양립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여성고용에 집중하고, 출산율에 대한 효과성 분석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출산율 제고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도 대부분 둘째아 이상의 출산 또는 출산휴가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어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

■ **모성보호제도 또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추가자녀 출산 또는 출산휴가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음**

- 정성호(2012)[4], 김일옥 등(2011)[5]은 일·가정 양립 정책 인지도, 이용 경험 등이 추가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Lalive and Zweimuller(2009)[6]은 오스트리아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 이후, 첫째를 출산한 여성들이 이전보다 둘째를 더 많이 출산하였다고 분석
- 홍승아 등(2008)[7]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OECD 국가의 출산휴가 기간 및 휴가급여의 임금대체율이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분석
- Averett and Whittington(2001)[8]은 미국의 전국 청년종단조사(National Longitudial Survey of Youth)를 이용하여 출산휴가가 여성의 출산확률을 증가시킨다고 평가함

이하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첫째아를 포함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3) Ruhm, C. J.,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arental Leave Mandates: Lessons from Europ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98
4) 정성호,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2012
5) 김일옥·왕희정·정구철·최소영, "출산장려 정책과 근로시간이 기혼여성의 둘째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4(3), 2011
6) Lalive, R. and Zweimuller, J., How does parental leave affect ferility and return to work? Evidence from two natural experimen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09
7) 홍승아 외,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8) Averett, S. L. and Whittington, L. A., Does Maternity Leave Induce Births? *Southern Economic Journal*, 2001

3. 분석자료 및 분석기법

가. 분석자료

본고는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조사년도의 상태와 다음 조사년도의 출산여부변수를 연결하여 분석을 수행

■ **여성가족패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로 여성의 경제활동, 가족실태, 건강 등에 대해 추적 조사**

-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가구원이 포함된 9,068가구를 추출한 후, 해당 가구에 포함된 여성 9,997명에 대해 조사를 수행
- 1차년도(2007년)와 2차년도(2008년)는 1년 단위로 조사되었고, 3차년도(2010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어 현재 7차년도(2018년)까지 데이터가 공개
- 본고에서는 2~7차년도(2008~2018년)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음

■ **개인 ID를 이용하여 특정 조사년도의 상태(취업 여부,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등)와 다음 조사년도의 출산여부변수를 연결**

- 출산여부변수는 지난 조사와 이번 조사 사이에 출산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각 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되기 때문에, 지난 조사 당시의 상태가 이후 2년 내 출산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분석의 대상을 49세 이하의 유배우 여성으로 한정**

분석에 이용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과 그 함의는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의 평균연령은 약 40세이며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중은 14%, 1명인 여성은 17%, 2명 이상은 70%**

■ **분석대상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약 30%이며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사용 가능한 여성의 비중은 약 21~22%로 확인**

■ **임금근로자의 출산 확률이 전체 여성의 출산 확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분석대상 중 약 3.5%의 여성이 분석기간 안에 출산을 경험한 반면,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약 2.9%가 출산을 경험

[표 3] 기초통계량

	전체	임금근로자	비고
출산 여부*	0.035 (0.18)	0.029 (0.17)	
자녀 수			
0명	0.14 (0.34)	0.15 (0.35)	
1명	0.17 (0.37)	0.15 (0.35)	
2명 이상	0.7 (0.46)	0.71 (0.45)	
연령(세)	40.09 (5.65)	40.61 (5.45)	
교육수준*	0.47 (0.5)	0.49 (0.5)	초대졸 이상 = 1
소득(로그)	2.08 (2.46)	4.87 (0.59)	
자가소유 여부*	0.67 (0.47)	0.67 (0.47)	
남편 연령(세)	43.05 (6.28)	43.47 (6.02)	
남편 교육수준*	0.56 (0.5)	0.57 (0.5)	초대졸 이상 = 1
남편 소득(로그)	3.84 (2.72)	4.27 (2.46)	
자산 대비 부채비율	0.42 (8.33)	0.43 (4.45)	부채 ÷ 자산
취업여부			
비취업*	0.51 (0.5)	-	
임금근로자*	0.3 (0.46)	1 (0)	
자영업자*	0.1 (0.3)	-	
특수고용 근로자*	0.03 (0.16)	-	
무급가족종사자*	0.06 (0.24)	-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0.06 (0.24)	0.21 (0.4)	사용 가능 = 1
출산휴가 사용 가능여부*	0.07 (0.25)	0.22 (0.41)	사용 가능 = 1
관측치	14,994	4,556	

주: 1. 표 안의 값은 평균값을, 괄호안의 값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2. *가 표기된 항목은 더미변수를 의미하며, 표 안의 값은 해당 변수 값이 1인 여성의 비중을 의미
3.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됨

나. 분석기법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모성보호제도가 출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종속변수가 출산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

-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설명변수가 이항 종속변수가 1이 될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는 기법으로 본고에서는 해당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누락변수 편의를 제거하고자 개인 및 배우자, 가정의 특성 등 출산과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였음

〈BOX 1〉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계수 추정 과정을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출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

$$Y_{i,t+1} = \alpha + \beta P_{i,t} + \gamma X_{i,t} + \theta_r + \tau_t + \epsilon_{i,t} \qquad \text{(식 1)}$$

Y : 지난 2년 사이의 출산 여부

P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X : 개인 및 가구 특성

θ_r: 거주지(광역시도) 고정효과, τ_t: 시간(조사차수) 고정효과

(하첨자 i는 개인, t는 조사차수를 나타냄.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3] 참조)

  - 위의 식에서 잔차 $\epsilon_{i,t}$가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우도함수를 도출할 수 있음[9)]

$$L = \prod_i \pi(\bullet)^{y_{i,t+1}} (1 - \pi(\bullet))^{1 - y_{i,t+1}}$$

$$\text{where } \pi(\bullet) = \frac{\exp(\alpha + \beta P_{i,t} + \gamma X_{i,t} + \theta_r + \tau_t)}{1 + \exp(\alpha + \beta P_{i,t} + \gamma X_{i,t} + \theta_r + \tau_t)} \qquad \text{(식 2)}$$

  - 반복 처리(Iteration Process)를 이용하여 위의 우도함수를 최대로 하는 최우추정량(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추정[10)]
  -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로그 승산비(Odds Ratio)에 대한 계수를 추정하지만, 본고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평균 한계효과를 계산하여 표기[11)]

■ **여성가족패널 데이터의 조사차수별 데이터를 횡단면 데이터로 활용하여 통합회귀분석(Pooled regression)을 수행하였음**

9) (식 2)의 우도함수를 도출하기 위해 $\Pr(Y=1|X) = \Pr(-\epsilon < \beta X)$라는 가정이 추가로 적용

10)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우도함수는 닫힌 형태(Closed Form)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처리를 통해 우도함수를 극대화하는 해를 도출

11)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계수를 한계효과로 변환할 경우 선형회귀분석 추정치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음.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확률의 비선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구간에 따라 한계효과가 다르게 추정되어, 본고에서는 구간별 한계효과의 평균값을 제시.

4. 분석결과

취업 여성의 출산확률은 비취업 여성 대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출산의사가 낮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진출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상관관계로 해석

■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취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

- [표 3]에 제시된 변수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가능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모형에 포함되었고, 거주지역(광역시도) 및 시간(조사차수) 고정효과를 추가적으로 통제

■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취업 여성의 출산확률은 비취업 여성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취업 여성 대비 임금근로 여성의 출산확률은 약 4.05%p, 자영업은 약 4.28%p, 특수고용은 약 3.87%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출산의사가 낮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결과는 취업이 출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상관관계로 해석할 필요

[표 4] 취업과 출산확률의 상관관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평균한계효과 (표준오차)	-0.0405** (0.0179)	-0.0428** (0.0176)	-0.0387** (0.0193)	0.0228 (0.0143)
관측치	14,994			

주: 1. 표 안의 값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결과를 나타내며 해석의 편의를 위해 평균 한계효과를 제시
2.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3. 취업 형태의 기준값(reference)은 비취업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사용 가능여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해당 제도가 임금근로자의 출산확률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모성보호제도는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

- 모성보호제도 사용 가능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하여 모성보호제도의 효과를 분석[12)]
- 분석을 통해 추정된 계수는 분석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효과를 의미

12) 해당 변수는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의 사용 가능여부를 나타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의 사용 가능여부 사이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두 정책의 효과를 각각 추정하는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의 결과는 모성보호제도가 출산 확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모형을 바꿔가며 통제변수의 차이에 따라 모성보호제도의 효과가 달라지는 여부를 확인**

- 개인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모성보호제도의 계수 추정치가 가장 크게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연령, 교육수준 등 개인변수들이 모성보호제도 효과 추정에 주요 교란변수로 작용함을 확인
- 가장 많은 통제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모형이 누락변수 편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라 판단하여 모형 4의 결과를 메인 분석결과로 선정
- 한계점으로는 가용한 데이터 내에서 변수를 구성하여 교란요소를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변수 편의가 존재할 수 있음

■ **분석 결과, 모성보호제도가 출산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모성보호제도 사용 가능여부는 임금근로 여성의 출산확률을 약 1.39%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모성보호제도의 사용가능 여부는, 비취업 여성 대비 취업 여성의 낮은 출산확률을 약 34.3%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석**

- 임금근로 여성의 출산확률이 비취업 여성 대비 약 4%p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모성보호제도는 비취업 여성 대비 취업 여성의 낮은 출산확률을 34.3%(1.39/4.05)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5] 모성보호제도 사용 가능여부가 임금근로자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성보호제도 사용 가능여부	0.0496*** (0.00621)	0.0169*** (0.00567)	0.0151*** (0.00541)	0.0139** (0.00548)
여성 연령		0.0210** (0.00846)	0.0182* (0.00988)	0.0202** (0.00991)
여성 연령 제곱		-0.000427*** (0.000131)	-0.000323** (0.000151)	-0.000345** (0.000151)
교육 수준		0.00177 (0.00581)	-0.0127** (0.00626)	-0.0143** (0.00643)
소득 (로그)		0.0131** (0.00564)	0.00478 (0.00538)	0.00932 (0.00587)
자녀수 (1명)			-0.00803 (0.00492)	-0.00880* (0.00510)
자녀 수 (2명 이상)			-0.0435*** (0.00708)	-0.0437*** (0.00704)
남편 연령			0.00707 (0.00824)	0.00575 (0.00829)
남편 연령 제곱			-0.000136 (0.000119)	-0.000125 (0.000119)
남편 교육 수준			0.0151** (0.00678)	0.0137** (0.00690)
남편 임금 (로그)			0.000134 (0.000854)	0.00133 (0.00157)
자가 보유 여부			-0.00186 (0.00457)	-0.000438 (0.00466)
자산 대비 부채 비율			0.000264 (0.000429)	0.000332 (0.000406)
개인변수	X	O	O	O
남편 및 가족변수	X	X	O	O
지역 및 시간 고정효과	X	X	X	O
관측치	4,556	4,556	4,556	4,556

주: 1. 표 안의 값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결과를 나타내며 해석의 편의를 위해 평균 한계효과를 제시함
2.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3. 모성보호제도 사용 가능여부는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의 사용 가능여부를 의미
4. 모형 4에는 거주지역(광역시도) 고정효과 및 시간(조사차수) 고정효과가 더미변수로 통제되었지만 지면의 한계로 추정치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5. 결론 및 시사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취업 여성의 출산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취업 여성은 비취업 여성 대비 출산확률이 약 4%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출산의사가 낮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결과는 취업이 출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상관관계로 해석할 필요

■ **모성보호제도의 제공이 비취업 여성 대비 취업 여성의 낮은 출산확률을 약 34.3%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률이 높지 않아 제도 개선을 통해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모두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용률 또한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 2019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15~49세 여성근로자 수는 400.3만명으로 여성근로자 전체(685.7만명) 대비 58.4% 수준
- 윤자영(2014)[13], 배호중·천재영(2018)[14] 등 다수의 연구에서 모성보호제도의 사용률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는 상황

■ **특수형태근로자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필요가 상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개인단위로 연계하여 근로감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로 직장복귀 및 일정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함

13) 윤자영, 「모성보호제도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4
14) 배호중·천재영,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신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2018, p.111

■ **아울러, 평등한 부모역할(equal parenthood)에 근거하여 남성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체육아휴직자 대비 남성육아휴직자 비중은 2016년 기준 8.5%으로 OECD평균(18.0%)보다 낮은 수준
- 육아는 부모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아래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15], 대기업 중심의 남성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개선하여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5) 김영옥·이택면·강민정·임희정·나성은(2014)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41.9%)', '승진 등 직장 내 경쟁력에서 뒤처짐(19.4%)', '동료들의 업무부담(13.4%)'등의 이유로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0년 11월호 | 통권 제11호

발행일 2020년 11월 23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 국회예산정책처, 2020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경제 통계

예·결산 심사연혁 제공

국제통계 (OECD·IMF 등)

북한통계

* NABOSTATS의 모든 통계정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엄선된 주요 통계는 매년 경제재정수첩, 조세수첩 등 책자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
희망한 미래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287